



기타보고서 2022-02

문재인 정부와 복지국가

김기태

류진아·강지원·노현주·조성은·여나금·이원진·오욱찬·안영·여유진



**BIG
DATA**



■ 저자

김기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류진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원
강지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복지국가연구단장
노현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조성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여나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이원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오옥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안 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원
여유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I. 문재인 정부의 시대정신과 복지국가	1
1. 보편적 복지국가의 이념형적 모델	1
2. 문재인 정부가 직면했던 5대 위기	3
3. 문재인 정권 이전의 복지국가 발달	11
II. 문재인 정부 포용적 복지국가를 향한 노력과 결과	15
1. 문재인 정부의 포용적 복지국가의 비전과 전략	15
2. 문재인 정부의 포용적 복지국가 정책 추진 결과	19
III. 문재인 정부 사회정책의 성과	31
1. 복지국가의 구조적 체계 완비 및 내실화	31
2. 공적이전 확대를 통한 소득 안정성 확보	36
3. 양극화 및 불평등 완화	38
4.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대응의 버팀목	42
5. 삶의 질 및 정부 신뢰도 향상	45
IV. 문재인 정부가 한국 복지국가에 주는 의미 및 앞으로 과제	49
1. 한국 복지국가에 남긴 의의	49
2. 한국 복지국가의 과제	55
참고문헌	59

표 목차

〈표 1-1〉 중앙정부의 기능별 지출 추이	9
〈표 1-2〉 중앙정부의 기능별 지출 추이(GDP 대비)	9
〈표 1-3〉 역대 정부의 복지국가 변천 개요	11
〈표 2-1〉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 피보험자 현황(2021. 10. 27)	21
〈표 2-2〉 소득정보 인프라 구축 현황	21
〈표 2-3〉 최근 5년간 모성보호 육아지원 사업 제도 개선	25
〈표 2-4〉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추이	26
〈표 3-1〉 사회적 위험에 따른 제도별 개선 내용(대상, 급여, 자원, 인프라를 기준으로)	31
〈표 3-2〉 Legatum Index의 삶의 질 지수	46
〈표 3-3〉 한국인들의 복지에 대한 태도	47



[그림 1-1] 복지-경제-고용의 골든 트라이앵글 혹은 민주적 복지 자본주의의 이념형적 선순환구조	1
[그림 1-2] 복지국가의 소득 평탄화 기능(이념형)과 한국의 현실(2011년)	2
[그림 1-3] 복지국가의 생애주기별 빈곤 평탄화 효과	3
[그림 1-4] 한국인의 행복 수준	3
[그림 1-5] 비정규직 규모(좌)와 자영자(우) 추이	5
[그림 1-6] 플랫폼 종사자 규모(좌) 및 직종분포(우)	5
[그림 1-7] 정규직, 비정규직 임금격차(좌)와 생애후반부 불평등의 상승(우)	6
[그림 1-8] 세계 경제정책 불확실성지수(좌)와 전세계 자연재해 경제적 손실 규모(우)	6
[그림 1-9] 21세기 바이러스 발생 개관	7
[그림 1-10]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	7
[그림 1-11] 한국의 급속한 고령화 추세	8
[그림 1-12] 노인부양비(좌)와 잠재성장률(우) 추이	8
[그림 1-13] 한국 정부에 대한 낮은 신뢰 수준	10
[그림 1-14] 사회보장 확대(좌)와 추가 세금 부담(우)에 대한 태도	10
[그림 1-15] 역대 정권별 복지국가 성격 변화 및 문재인 정부가 직면한 상황	12
[그림 1-16] 한국의 '저부담, 저복지' 복지국가 유형의 한계	13
[그림 2-1] 문재인 정부의 복지국가 비전	15
[그림 2-2] 2017년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좌)과 2018년 포용국가 3대 비전과 9대 전략 (우)	16
[그림 2-3] 2020년과 2021년 한국판 뉴딜 1.0 및 2.0 계획	17
[그림 2-4] 교육급여액 변화 및 장학금 수혜 인원 변화	26
[그림 2-5] 역대 정권의 GDP 대비 공공사회지출 비율 변화 추이	29
[그림 3-1] 복지국가 서비스 분야에서의 구조적 완비	35
[그림 3-2] 한국 복지국가의 제도적 완비 과정	35
[그림 3-3] 공적이전소득 평균	36
[그림 3-4] 공적이전소득 항목별 평균	37
[그림 3-5] 공적이전소득 평균-가처분소득 평균	38
[그림 3-6] 전체 인구 소득분배지표	39
[그림 3-7] 인구집단별 빈곤율	40
[그림 3-8] 인구집단별 빈곤갭비율	40
[그림 3-9] 2016~2019년 생애주기별 소득 변화	41
[그림 3-10] 생애주기별 소득 분배 이념형 및 2016~2019년 사이 한국의 생애주기별 가처분 소득 변화	41
[그림 3-11]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주요 정책 추진내용	42
[그림 3-12] 2017~2021년 소득 증감률 추이	43
[그림 3-13] 코로나19 대응 건강보험 추가지원 현황	44
[그림 3-14] 국민으로서의 자부심, 전반적인 사회통합, 신뢰도 수준	45
[그림 4-1] 복지국가의 4대 구성 요소의 측면에서 중요한 진전	49
[그림 4-2] 복지-경제-고용의 악순환 구조와 선순환 구조	50
[그림 4-3]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이후 주요국가들의 GDP 변동 추이	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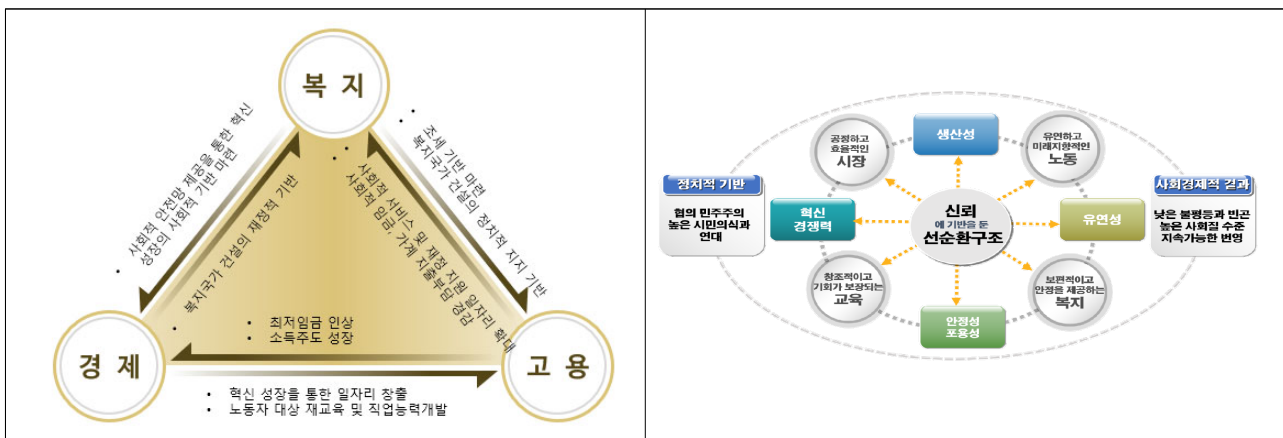
[그림 4-4] 저임금 노동자 비율 및 노동소득분배율	51
[그림 4-5] 문재인 정부 시기 끝난 트라이앵글의 성과	52
[그림 4-6] OECD의 한국 경제 보고서	52
[그림 4-7] '중부담, 중복자'로의 궤적 이동	53
[그림 4-8] '중부담, 중복자'로의 궤적 이동	54
[그림 4-9] 중앙정부 차원의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방안	55

문재인 정부의 시대정신과 복지국가

1. 보편적 복지국가의 이념형적 모델

- 한국은 전쟁 이후 빠른 속도로 ‘압축 성장, 압축 복지(김미곤 외, 2018)’의 경로를 밟았으며, 1990년 후반에야 복지국가의 뼈대를 갖추었음.
- 김영삼 정권(1993~1998) 이후 한국의 민주적 복지 자본주의(Democratic Welfare Capitalism)의 이념형은 보편적 복지국가로 볼 여지가 있음.
- 이는 시민의 연대(solidarity)와 민주주의 정치체를 통해 시장 자본주의의 무자비하고 무제한적 탐욕과 불평등을 순화하고 교정함으로써 시민의 안녕(well-being)과 지속가능한 번영(sustainable prosperity)의 선순환을 추구하는 국가 체제([그림 1-1] 참고)

[그림 1-1] 복지-경제-고용의 골든 트라이앵글과 민주적 복지 자본주의의 이념형적 선순환구조



자료: 1) 왼쪽 그림은 필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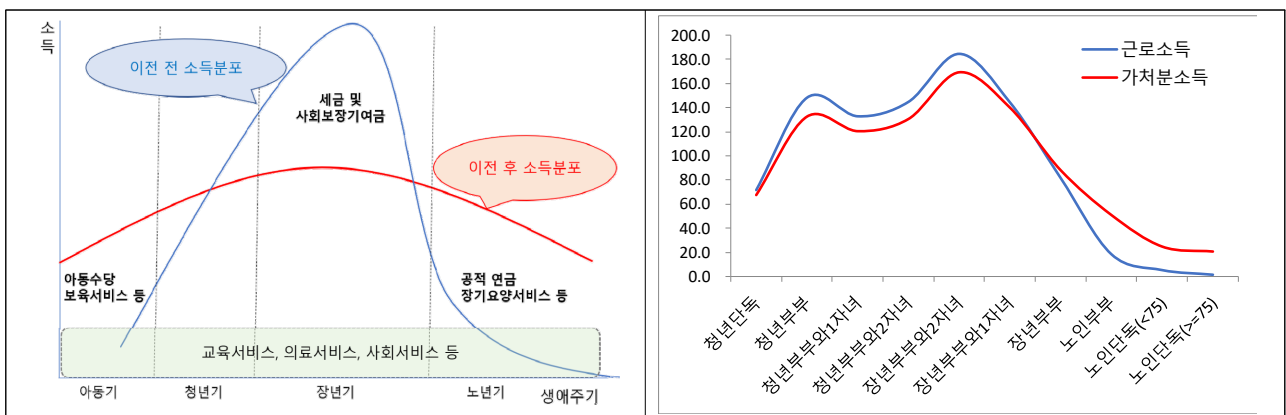
2) 오른쪽 그림은 여유진 외. (2019). 노르딕 모델과 대륙형 모델의 형성 및 변천과정 연구. p. 323 그림 참고하여 작성.

- 특히, 보편적 복지국가는 시장 자본주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노령, 질병, 실업, 장애 등-에 사전적, 사후적으로 대비(응)하여 전체 시민의 안정(security)과 안녕(well-being)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체제임.
- 보편적 복지국가의 구성 요소는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음. 첫째, 커버되는 대상의 보편성, 둘째, 지급되는 복지급여의 적절성, 셋째, 재정적 공공성 및 안정성, 마지막으로, 인프라의 효

과성, 효율성 및 공공성.

- ① 대상의 보편성: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하며, 특히 사회적 위험의 발생 확률이 높지만 개인 차원에서 이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취약집단을 빠짐없이 보호함.
- ② 지급되는 복지급여의 적절성: 급여 수준과 여타의 자원을 모두 합했을 때 그 수준이 최소 그 사회가 인정하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 수준(National Minimum) 이상이어야 하며, 가능한 이전의 생활 수준을 어느 정도 영위할 수 있어야 함(적정 소득대체율).
- ③ 재정적 공공성 및 안정성: 사회보장의 재원적 기반은 지속가능해야 하며, 다른 세 가지의 원칙에 부합하는 수준의 직·간접적인 공적 지원을 담보해야 함.
- ④ 인프라의 효과성, 효율성 및 공공성: 사회보장의 전달체계가 효과적, 효율적이며, 공공성에 부합해야 함. 재정적으로 지속가능해야 하며, 복지국가에 대한 시민의 높은 신뢰가 뒷받침되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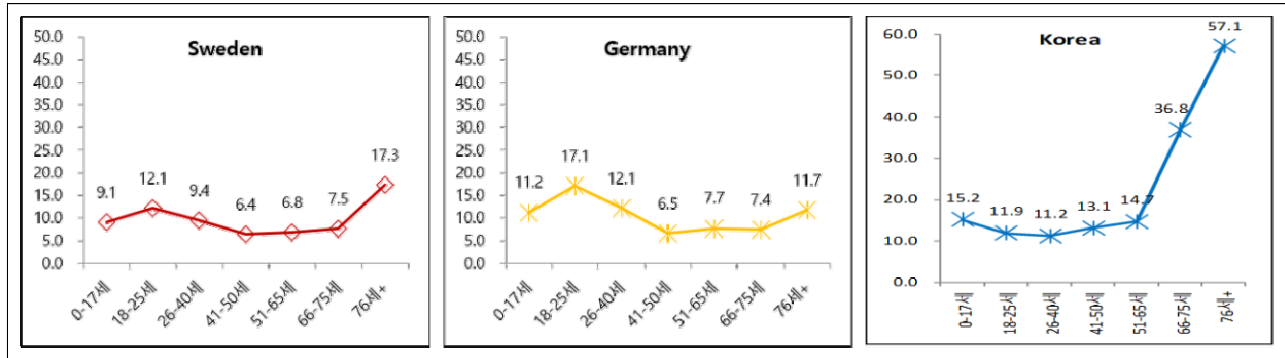
[그림 1-2] 복지국가의 소득 평탄화 기능(이념형)과 한국의 현실(2011년)



자료: 여유진. (2016). 생애주기별 소득·재산의 통합 분석 및 함의. pp. 2-3.

- 기능적으로는 조세와 공적 이전(transfer)을 통한 계층 간, 세대 간, 생애주기 간 재분배를 통해 소득과 소비를 평탄화함으로써 빈곤을 예방하고 사회통합을 촉진하며 사회경제적 재생산을 가능케 함([그림 1-2] 참고).
 - 그 결과, 복지국가 스웨덴, 독일의 예에서와 보는 바와 같이 생애주기별 빈곤율은 평탄하게 나타남.
 - 반면 한국은 근로능력이 약해지는 노령기 초기부터 빈곤율이 급상승함(저기능 복지국가) ([그림 1-3] 참고).

[그림 1-3] 복지국가의 생애주기간 빈곤 평탄화 효과



자료: 여유진 외. (2019). 노르딕 모델과 대륙형 모델의 형성 및 변천과정 연구. p. 315의 그림 일부를 인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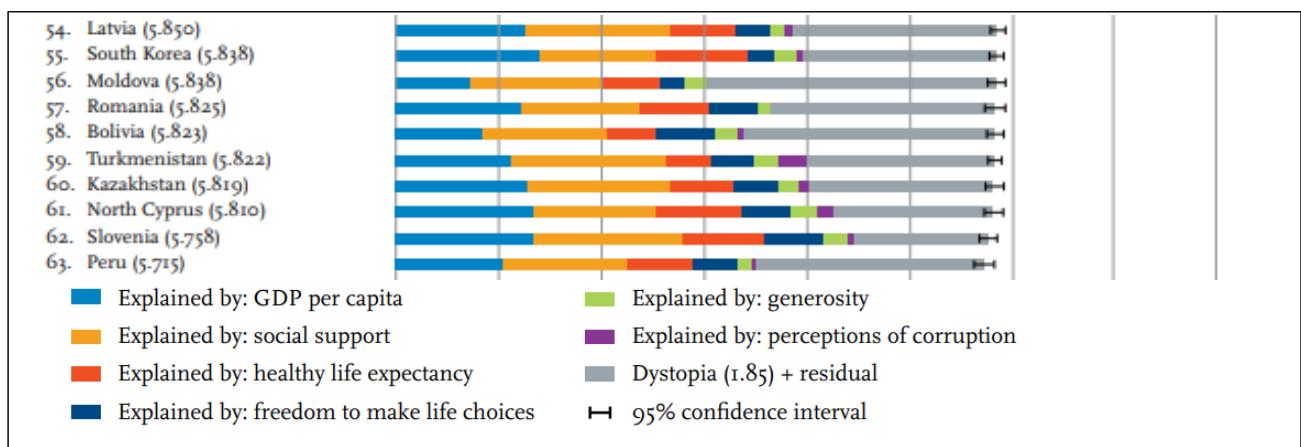
2. 문재인 정부가 직면했던 5대 위기

□ 한국의 복지국가는 생활·노동·경제·사회·정부 신뢰의 5대 위기에 직면해 있었음.

- 한국 복지국가는 뒤늦은 출발로 인한 ‘구(舊) 사회적 위험’(노령, 실업, 질병, 산재)과 ‘신(新) 사회적 위험’(인구 고령화, 근로빈곤, 돌봄, 감염병, 온난화 등)의 혼재
- 구 사회적 위험에 대한 대응 체계가 성숙되기 전에 급격하고 위협적인 새로운 도전들에 직면

□ 첫째, 생활의 위기

[그림 1-4] 한국인의 행복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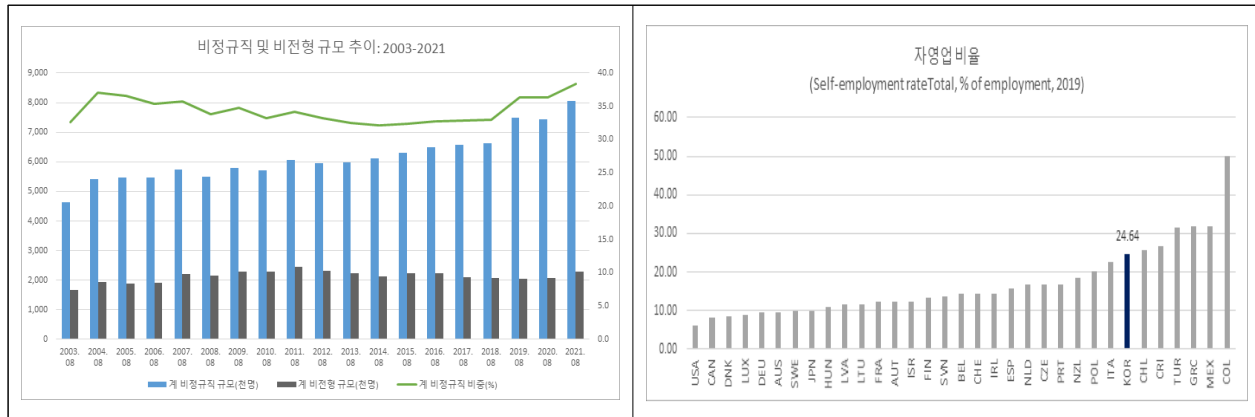
자료: Helliwell, J. et al. (2017). World Happiness Report 2017. p. 21.

- **현상:** 생계와 일상을 개인의 힘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삶의 불안감 확산. 행복 및 삶의 만족도가 매우 낮은 나라.
 - 다른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경제적인 성취에도 불구하고 삶의 질, 삶의 만족도, 행복 수준이 낮음. 이른바 ‘성장 대비 저행복 국가’로 분류됨.
 - 한국인의 행복 수준은 지난 2014~2016년 비교 대상 국가 가운데 55위. 경제 수준, 사회적 지지, 건강 수준 등을 고려했을 때, 한국인은 알제리인(53위), 라트비아인(54위)보다 행복 수준이 낮고, 몰도바인(56위), 루미니아(57위)보다 약간 더 높은 수준 (Helliwell et al, 2017).
 - 한국은 특히 사회적지지, 관대성, 부패인식 등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음. 한국은 경제 수준이 나 건강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의 행복 수준은 낮았음.
 - 참고로, 전통적인 보편적 복지국가에서 행복 수준은 가장 높게 나타났음. 노르웨이, 덴마크, 아이슬랜드가 1~3위 (Helliwell et al, 2017).
- **(예상) 결과:** 경제 수준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주관적인 삶의 질 하락은 불평등 및 양극화의 결과일 수 있음. 이는 국가 및 제도에 대한 불신 혹은 개혁의 요구로 이어질 가능성.
 - 압축 성장 과정에서 하는 양극화, 격차, 불평등을 한국 복지국가의 미성숙으로 인해서 해소하지 못한 결과. 과거 고속 성장 과정에서 시장을 통한 분배가 중산층을 형성하면서 분배에 대한 요구를 수용했으나, 그와 같은 분배 모델은 한계를 보이기 시작.
 - 적극적인 분배/재분배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수용하지 못할 경우, 행복 및 삶의 질 문제는 개선하기 어려움. 이는 한국 복지국가의 중대한 도전.

□ 둘째, 노동의 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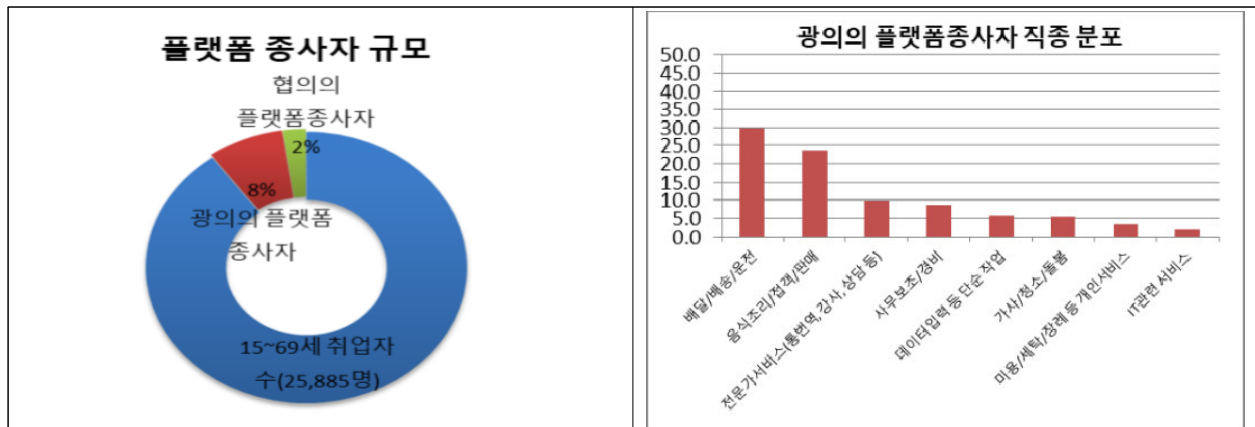
- **현상:** 노동시장 이중구조화, 새로운 근로형태(긱노동, 플랫폼 노동)의 출현과 증가
 -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규모는 32.9%(‘17. 기준)로 약 3명 중 1명이 불안정한 일자리에 취업(여성, 고령, 서비스 일자리에 집중)
 - 비임금근로자의 비중은 25.4%(‘17년 기준)로 OECD 회원국 중에서도 높은 수준. 이 가운데 상대적으로 영세한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도 전체 취업자의 15.3%를 차지.
 - 택배 기사, 대리운전 기사, 가사도우미 등 디지털 기반 프리랜서 근로자가 급증하는 추세. 이들은 기존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으며, 이들을 위한 사회보장 시스템을 재편해야 한다는 시대적인 요구가 점증하고 있음.

[그림 1-5] 비정규직 규모(좌)와 자영업자(우) 추이



자료: 1) 통계청. (2021a). 경제활동인구조사: 성/근로형태별 임금근로자 규모 및 비중(총괄).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E7106S&conn_path=I3 에서 2022.1.25. 인출.
 2) OECD. (2022a). Self-employment rate (indicator). <https://data.oecd.org/chart/6EfG> 에서 2022.2.7. 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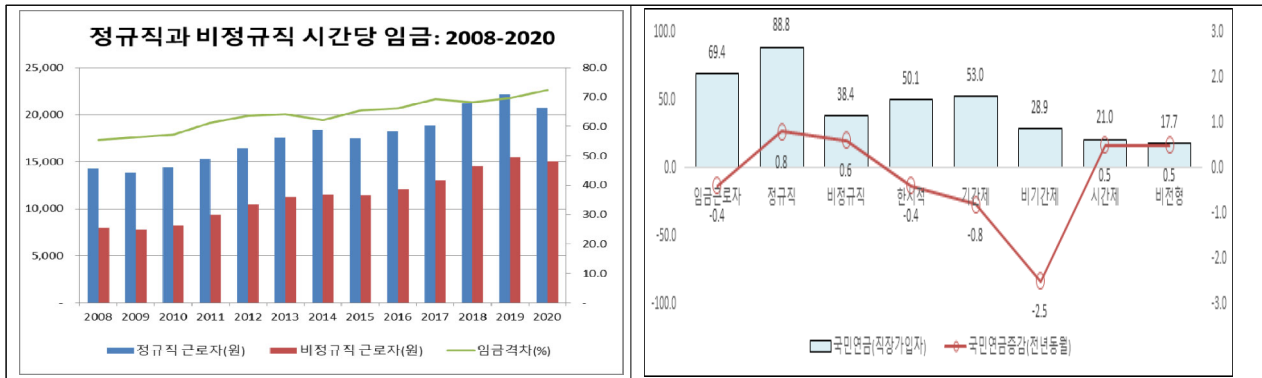
[그림 1-6] 플랫폼 종사자 규모(좌) 및 직종분포(우)



자료: 김준영, 장재호, 김강호, 박상현. (2021). 플랫폼 종사자의 규모와 근무실태. p. 17의 표를 재구성함.

- (예상) 결과: 근로소득(궁극적으로는 부) 양극화와 불평등 상승, 사회보장 사각지대의 확대(남유럽 경로의 답습 가능성)
 - 정규직과 비정규직, 영세자영업자, 플랫폼 종사자 간 근로소득, 근로환경, 안정성 등에서 큰 격차가 발생할 뿐 아니라 사회보험 가입률에서도 큰 차이를 보임.
 - 사회보험은 안정적인 정규직 근로자를 기준으로 도입된 제도로 비정규직, 자영업자, 플랫폼종사자들은 낮은 커버리지를 보이며, 이는 노후소득의 빈곤과 불평등으로까지 이어짐을 의미.

[그림 1-7] 정규직, 비정규직 임금격차(좌)와 생애후반부 불평등의 상승(우)



자료: 1) 고용노동부. (2021a).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https://www.index.go.kr/potal/stts/idxMain/selectPoSttsIdxMainPrint.do?idx_cd=2478&board_cd=INDX_001 에서 2022.1.25. 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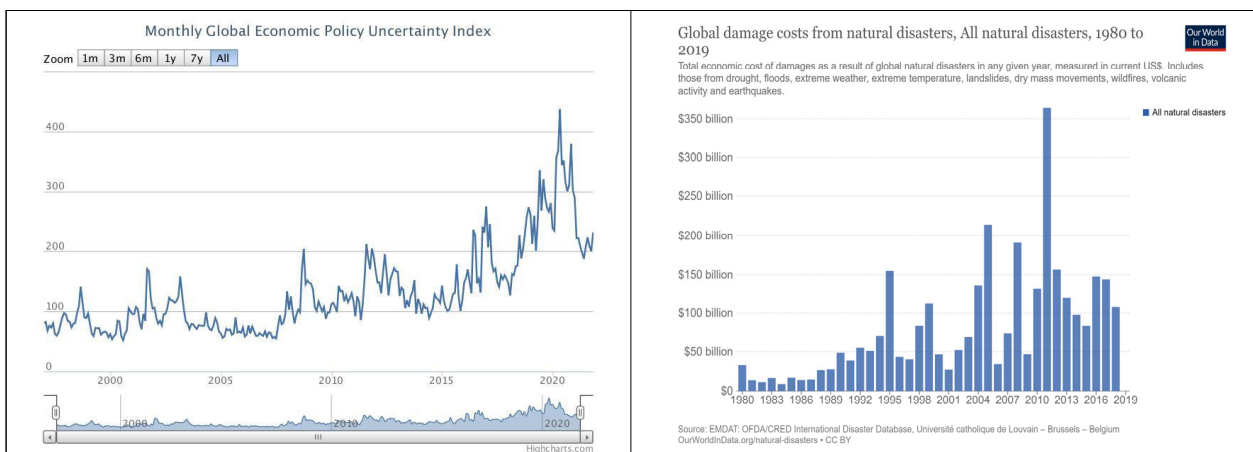
2) 통계청. (2021b).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사회보험가입자 비율 및 증감.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E7081S&conn_path=I3 에서 2022.1.25. 인출.

□ 셋째, 경제의 위기

○ **현상:**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증가와 (비)주기적 위기의 빈발, 기후 위기의 발발

- 2008년 세계금융위기, 가상화폐 출현,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의 빈발, 미·중 무역갈등 등으로 신냉전 국면으로의 전환 가능성 등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추세.
- 한국에서도 이상 기후 등으로 관찰되는 기후위기의 문제가 현실화하고 있음. 이에 따라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탄소경제로의 전환 필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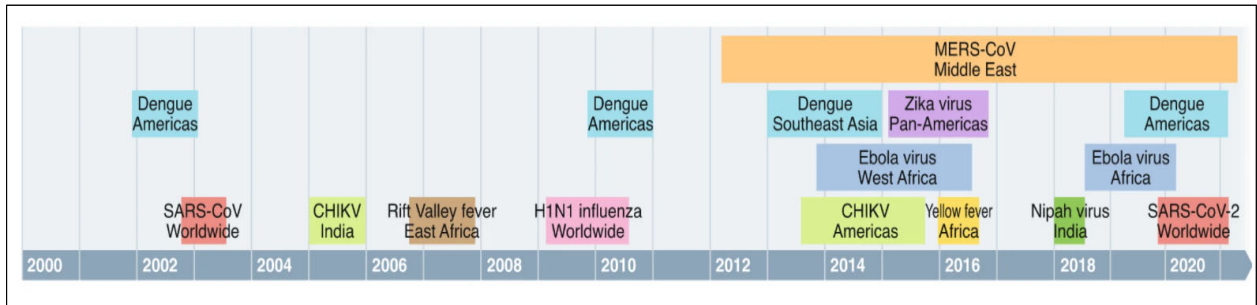
[그림 1-8] 세계 경제정책 불확실성지수(좌)와 전세계 자연재해 경제적 손실 규모(우)



자료: 1) Economic Policy Uncertainty. (2022). Economic Policy Uncertainty Index. <https://www.policyuncertainty.com/index.html> 에서 2022. 1. 23. 인출.

2) EM-DAT. (2020). OFDA/CRED International Disaster Database. Université catholique de Louvain & #8211; Brussels & #8211; Belgium. <http://asq.kr/yUNvz0DZ> 에서 2022.1.25. 인출.

[그림 1-9] 21세기 바이러스 발생 개관



자료: Rita M. Meganck & Ralph S. Baric. (2021). Developing therapeutic approaches for twenty-first-century emerging infectious viral diseases.

○ **(예상) 결과:** 급격한 경기 변동은 복지국가의 물적 토대를 약화할 가능성. 이와 같은 변화의 파장은 주로 사회의 취약계층에 집중될 가능성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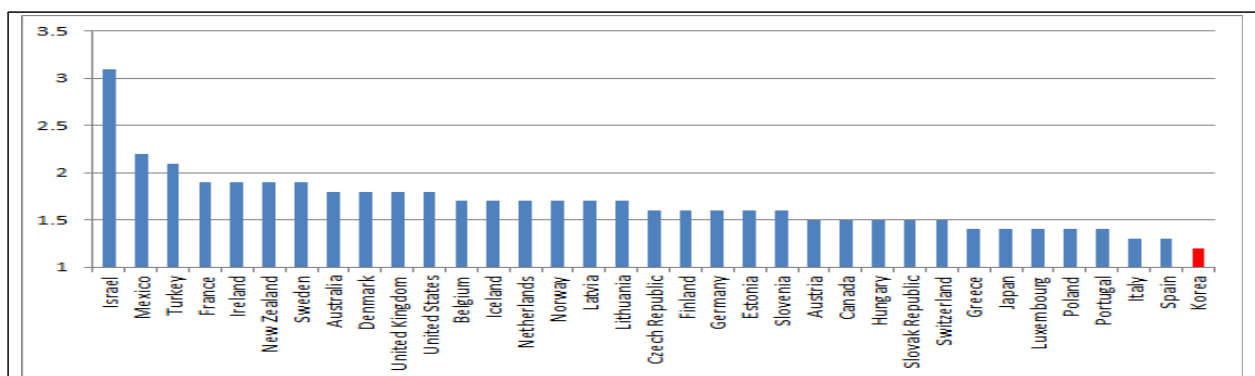
- 코로나19 범유행 상황에서 영세 자영업자 및 불안정 노동 집단에서 피해가 집중된 바 있음. 급격한 경기 변동 및 경제 환경 변화 상황에서 새로운 형태의 빈곤·불평등 발생 가능성.

□ 넷째, 사회의 위기

○ **현상:**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과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

-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16년 1.172명, 2017년 1.052명으로 2년 연속 세계 최하위.
- 2017년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중은 13.8%로 OECD 국가 중 높은 수준은 아니나 인구고령화 속도는 최상위로 2060년 전체 인구 중 노인 비율은 43.8%에 이를 것으로 추정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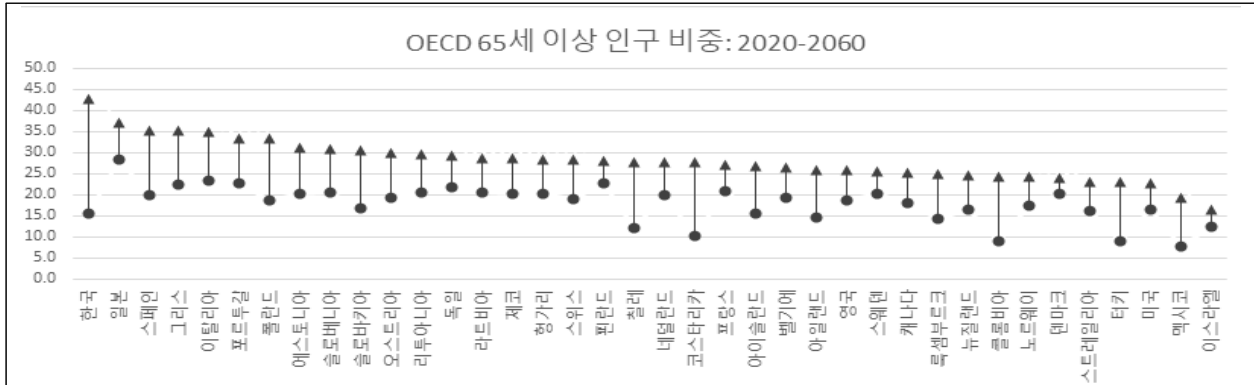
[그림 1-10]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



자료: 1) OECD. (2019), Fertility rates (indicator). 조성은 외 (2019) 그림 5-17에서 재인용.

1) 통계청. (2021.12.9.). 장래인구추계: 2020~2070년(보도자료). https://kostat.go.kr/portal/korea/kor_nw/1/2/6/index.board?bmode=read&bSeq=&aSeq=415453&pageNo=1&rowNum=10&navCount=10&currPg=&searchInfo=&sTarget=title&sTxt= 예서 2022.1.25. 인출.

[그림 1-11] 한국의 급속한 고령화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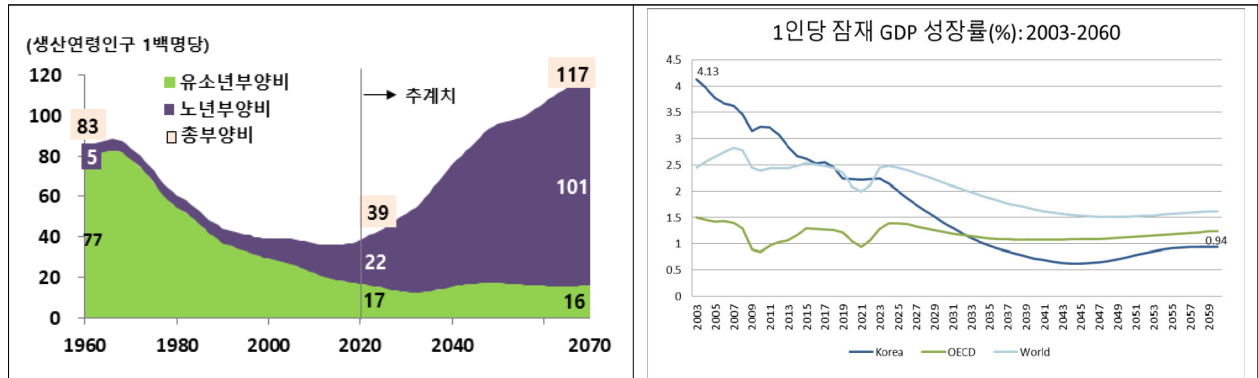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2021c). 부양비 및 노령화지수(OECD).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2KAA202_OECD&conn_path=I3 에서 2022.3.31. 인출.

○ (예상) 결과: 노인부양비 급등과 잠재성장률의 하락

- 2070년이 되면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노인부양비는 101, 즉 생산연령인구 1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 도래
- 인구 고령화의 영향으로 잠재성장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30년 이후에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2020~30년 1.9%, 2030~60년 0.8%)(OECD, 2021a).

[그림 1-12] 노인부양비(좌)와 잠재성장률(우) 추이



자료: 1) 통계청. (2021.12.9.). 장래인구추계: 2020~2070년(보도자료). https://kostat.go.kr/portal/korea/kor_nw/1/2/6/index.board?bmode=read&bSeq=&aSeq=415453&pageNo=1&rowNum=10&navCount=10&currPg=&searchInfo=&sTarget=title&sTxt= 에서 2022.1.25. 인출.

2) OECD. (2021a). Economic Outlook No 109 - October 2021 - Long-term baseline projections. 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EO109_LTB 에서 2022.1.25. 인출.

□ 다섯째, 정부 신뢰의 위기

○ 현상: 개발주의 유산과 물질 만능주의, 극단적 개인주의의 혼재

- 산업화 과정에서 행정기구와 예산 비중으로 대표되는 국가기능을 경제개발 위주로 편재함으로써 국가의 복지 기능이 주변화
- 최근까지도 한국 정부의 지출 구조는 경제개발비, 국방비 지출이 OECD 평균보다 높은 반면, 사회복지지출은 OECD 평균의 절반 수준

〈표 1-1〉 중앙정부의 기능별 지출 추이

(단위: %)

구분	사회보장	일반행정	교육	경제	보건	국방
2002	13.0	15.9	16.8	22.8	9.6	8.7
2010	17.8	15.6	15.0	18.1	12.7	7.9
2019	22.5	12.3	15.1	14.4	15.3	7.6

자료: 통계청. (2022). 정부 지출 구성. http://index.go.kr/smart/mbi/chart_view.do?idx_cd=5017 에서 2022.4.4. 인출.

〈표 1-2〉 중앙정부의 기능별 지출 추이(GDP 대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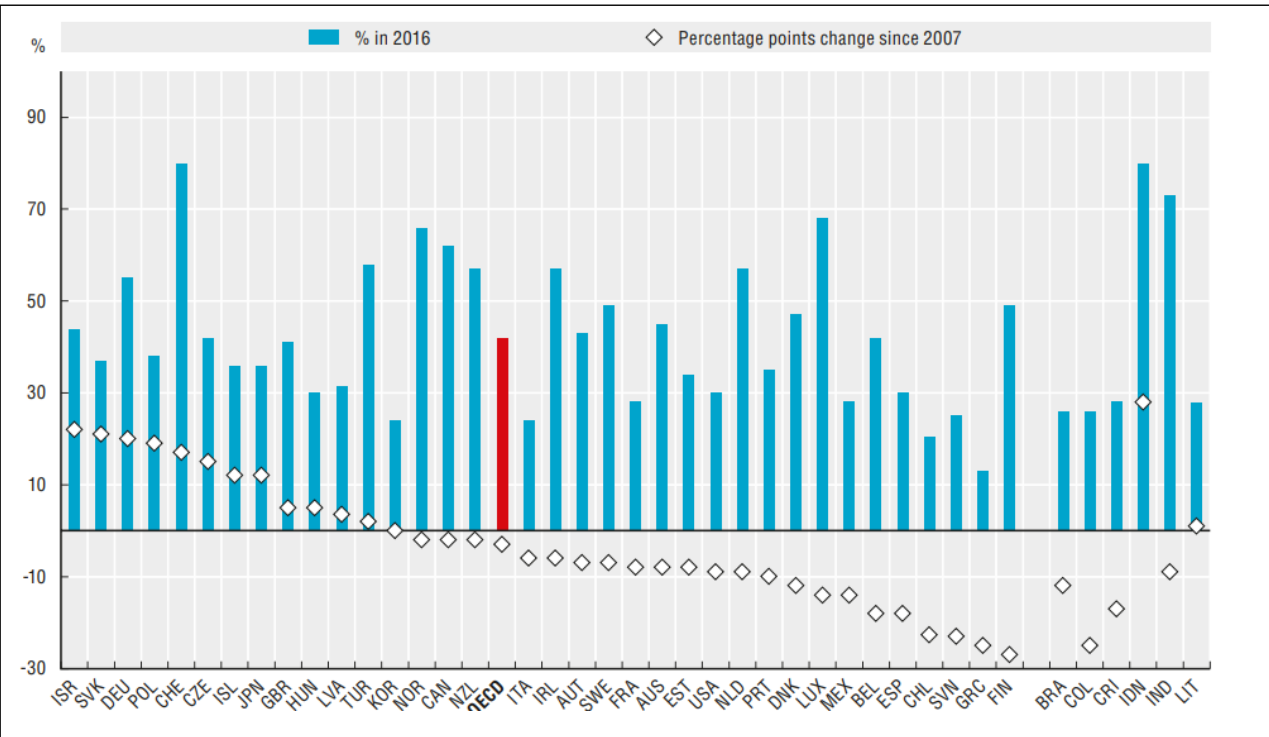
구분	일반 행정 서비스	국방	안전	경제 개발	환경 보호	주택 및지역 개발	건강	문화	교육	사회 복지	계
한국(2006)	4.0	2.8	1.4	6.4	1.0	1.2	4.1	0.9	4.7	3.7	30.2
OECD평균(2006)	6.0	1.4	1.6	4.5	0.7	0.8	6.5	1.1	5.6	15.2	43.5
한국(2019)	4.0	2.4	1.2	4.4	0.8	1.0	4.7	1.0	4.8	6.9	
OECD평균(2019)	5.4	2.2	1.7	3.9	0.5	0.6	7.9	0.7	5.1	13.3	

자료: 1) OECD. (2009). Government at a glance 2009.

2) OECD. (2021b). Government at a glance 2021.

- 여전히 다수 국민은 경제성장과 국가의 질서 유지, 경제 안정과 같은 항목에 가치를 두고 있음을 확인.
- 한국의 정부 신뢰도는 OECD 국가들 중 하위권에 속함 (OECD, 2017; OECD, 2021c). OECD의 정부신뢰도 평가에 따르면, 한국은 국민들의 정부신뢰도가 24%로, 2017년 OECD 회원국 가운데 32위로 나타났다.

[그림 1-13] 한국 정부에 대한 낮은 신뢰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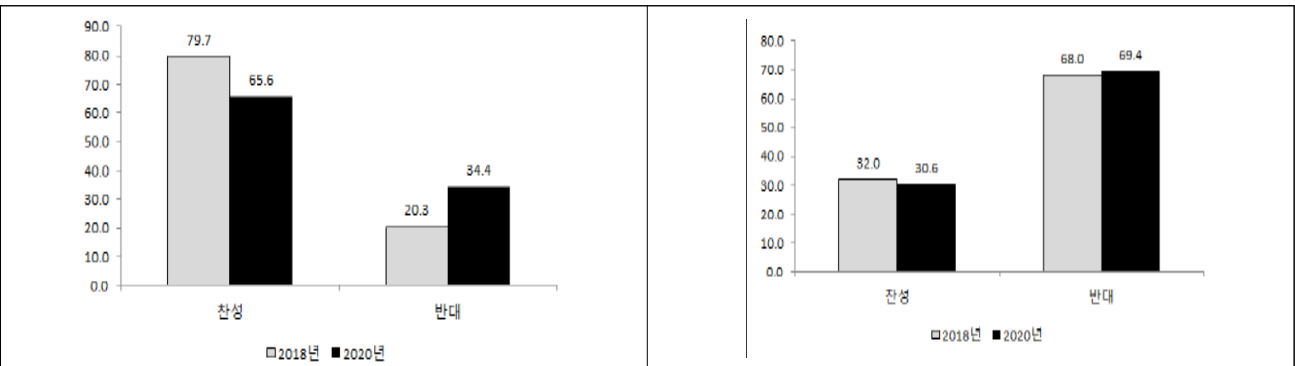


자료: OECD (2017). Government at a glance. 그림 13-1.

○ (예상) 결과: 낮은 복지 인식과 높은 기대 수준, 정부에 대한 낮은 신뢰

- 복지에 대한 높은 기대 수준은 높지만 이에 대한 부담 의향은 낮은 부정합성이 지속되고 있음. 복지국가의 확장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연대의식에 근거해서 조세 기반을 갖춰야 함. 정부에 대한 낮은 신뢰는 세금 부담 의지를 낮추며, 복지국가의 물적 토대를 약화시킴.

[그림 1-14] 사회보장 확대(좌)와 추가 세금 부담(우)에 대한 태도



자료: 김태완 외. (2020). 2020년 사회보장 대국민 인식조사 연구.

3. 문재인 정권 이전의 복지국가 발달

〈표 1-3〉 역대 정부의 복지국가 변천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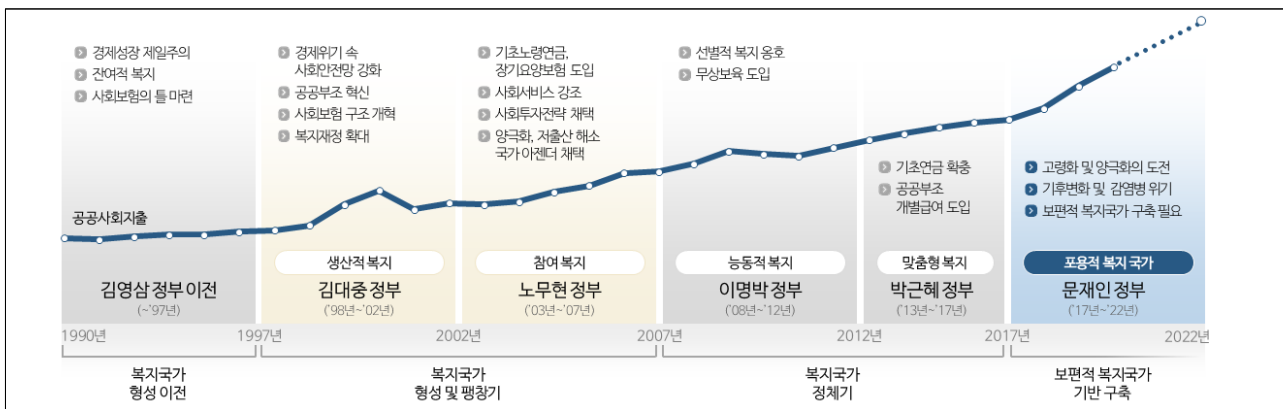
구분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1979)	(1980~1992)	(1993~1997)	(1998~2002)	(2003~2007)	(2008~2012)	(2013~2017)	(2017~)
복지국가 성격	잔여적 복지			생산적 복지	참여 복지	능동적 복지	맞춤형 고용·복지	포용적 복지
복지국가의 규모	소극적 복지, 성장을 통한 고용			복지 팽창기 (복지국가 형성기)		복지국가 정체기		복지 팽창기
사회적 과제	절대 빈곤 극복, 물가 안정	중산층 형성, 민주주의 요구 증대	민주주의 지역갈등 해소	경제위기 극복	양극화 대응, 노동시장 이중구조화	불평등 해소	불평등 해소	감염병 극복, 생태 전환
정치경제 사회적 배경	독재, 경제개발	독재, 3저 호황	문민정부, 경제위기	정권교체, 신자유주의적 구조 조정	저출산, 저성장 국면돌입	글로벌 금융위기	민주주의의 퇴보, 대통령 탄핵	촛불집회, 민주주의 복원
주요 제도	사회보협	공무원 연금(1960) 산재보험 (1964) 건강보험 (1977)	국민연금 (1988) 전국민 건강보험 (1989)	고용보험 (1995)	건보 조직 통합(2000) 전직장 산재보험 적용(2000)	건보 재정 통합(2003)	노인장기 요양보험 (2008)	고용보험 대상자 확대 상병수당 도입 결정 (2020)
	공공부조 및 사회복지수당	생활보호 제도(1962) 의료보호 제도(1977)	영세민 종합대책 (1982) 저소득층영구 임대주택 (1989)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000) 경로연금 (1998)	소득인정액 시행 (2003)	기초노령 연금 (2008) 장애인 연금 (2010)	기초연금 (2014) 기초보장 맞춤형 급여 (2014)
	사회서비스	가족계획 사업(1962)	재가노인복지 사업 (1987)	보육시설 확충 계획 (1995)	장애인 복지 5개년 계획 (1998)	한국사회 서비스 관리원 설립(2007)	0~2세, 만 5세 아동 무상보육 (2012)	사회서비스 원 설립 (2009~)
	기타		남녀고용평등법 (1987) 최저임금제 (1988)	여성발전기본법 (1994)	노사정위원회 (1998) 주 5일 근무제 (2002)	노인일자리 사업 실시 (2004)	근로장려 세제 (2008) 사회복지 통합관리 망가동 (2010)	주 40시간 근무제 (2018) 고교무상교육(2021) 국민취업지원제도 (2021)
GDP 대비 사회지출비 비율	자료 없음	2.6	3.0	4.4	5.9	7.9	9.6	12.2

주: GDP 대비 지출액 비율은 각각 1995, 2000, 2005, 2010, 2015, 2020년 기준임.

자료: OECD. (2022d). Global Revenue Statistics Database; 강혜규, 조성은, 이주민, 함영진, 문승현. (2021) 한국 보건의역사의 역사적 성찰과 정책패러다임 전환기의 과제; 최병호. (2014).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변천과 과제. 예산정책 연구를 참고해서 연구진 작성.

- 한국은 전쟁 이후 빠른 속도로 압축 성장의 경로를 밟으면서, 빠른 경제 성장의 기반 위에 1990년 후반 복지국가의 뼈대를 갖췄음.
- 김영삼 정권(1993~1997)까지는 국가에서 복지에 대한 비전과 철학을 제시하지는 못했으며, 국가는 사회정책을 경제성장을 위한 수단으로 고려하는 발전주의적 경향을 보여왔음.
- 한국 복지국가는 60년대 공무원 연금(1960), 생활보호제도(1962)를 도입한 이후, 단계적으로 주요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하면서 형식적 열개를 갖추었음.
- 김대중 정권(1998~2002)은 ‘생산적 복지’의 사회정책의 방향을 처음으로 제시하면서 복지국가의 제도적 기반을 일부 갖추었음. 그러나, 이후 보수 정권을 거치면서 복지국가는 일정한 정체기를 거침.

[그림 1-15] 역대 정권별 복지국가 성격 변화 및 문재인 정부가 직면한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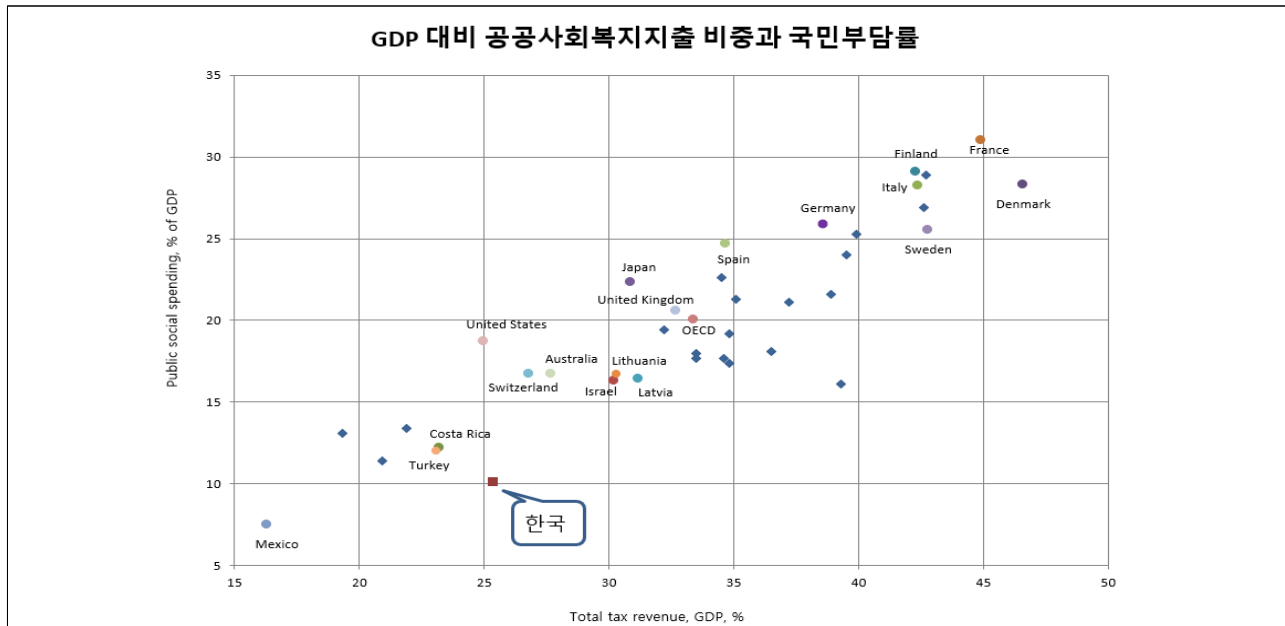
자료: 연구진 작성.

- GDP 대비 공공사회지출 규모, 국가의 사회권 보장 등의 측면에서 한국은 꾸준한 진전을 통해 복지국가의 토대를 갖췄음. 그러나 다른 복지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여전히 ‘저부담, 저복지’ 복지국가의 성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사회보험의 미성숙이 한국에서 작은 복지국가의 원인이기도 하지만, 여전히 사회정책은 경제성장의 수단으로 간주하는 개발형 복지국가(productivist welfare state)이 잔재를 벗어나지 못한 측면도 있음.
- 2017년에 집권한 문재인 정부는 초입부터 3종의 과제를 안고 있음.
- 미완의 복지국가 기획을 완결하기 위해 나가야 하며, 새로이 부상하는 돌봄, 고령화 등의 신사

회적 위험에도 대응해야 함.

- 이에 더불어 2020년 발발한 코로나19 범유행 상황 및 전 세계적인 기후 위기 역시 한국 복지 국가의 근간을 위협하며, 경제 및 사회 정책의 생태적 전환을 요구하고 있음.

[그림 1-16] 한국의 ‘저부담, 저복지’ 복지국가 유형의 한계



자료: OECD. (2022d). Global Revenue Statistics Database; OECD. (2022e). Social Expenditure Database 자료에 근거해 연구진 작성.

1. 문재인 정부의 포용적 복지국가의 비전과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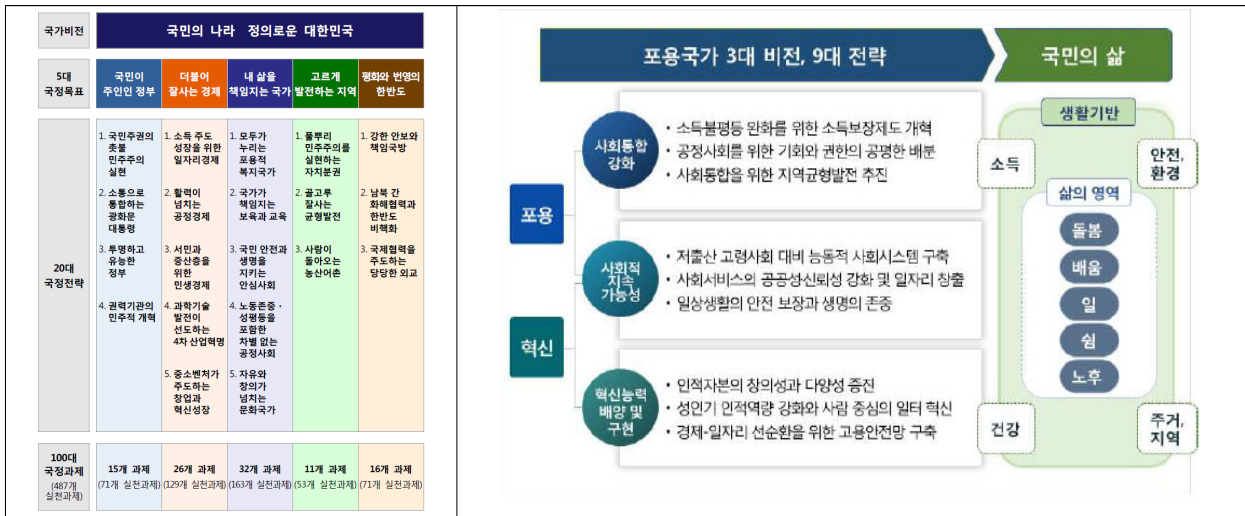
[그림 2-1] 문재인 정부의 복지국가 비전



자료: 교육부. (2018.9.13). 포용국가 전략회의 카드뉴스. <https://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72714&lev=0&statusYN=W&s=moe&m=0308&opType=N&boardSeq=75280#> 에서 2022.1.27. 인출.

- 문재인 정부는 2017년 100대 국정과제를 제시하면서 5대 국정목표 가운데 하나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를 제시. 20대 국정전략의 하나로는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의 비전을 제시함.
-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의 비전 아래, 1)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 2) 고령사회 대비,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 보장, 3)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예방 중심 건강관리 지원, 4) 의료 공공성 확보 및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 제공, 5) 서민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 환경 조성 및 6)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 부담 경감의 정책 방향이 제시됨.
- 정부는 이듬해인 2018년 9월 포용국가 전략회의에서 포용국가에 도달하기 위한 3대 비전, 9대 전략을 제시. 포용국가 전략회의는 역대 정부 최초의 사회분야 합동 전략 회의로서 의의를 가짐.

[그림 2-2] 2017년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좌)과 2018년 포용국가 3대 비전과 9대 전략(우)



자료: 1) 국정기획자문회의. (2017.7).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2) 관계부처합동. (2019). 문재인 정부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

○ 포용국가 전략회의에서는 포용국가에 도달하기 위한 3대 비전, 9대 전략을 제시하면서, '국민 전생애 기본생활보장 3개년 계획' 추진 계획을 밝힘. 여기서 3대 비전은 ▲사회통합 강화 ▲사회적 지속가능성 확보 ▲사회혁신능력 배양.

○2019년에는 혁신적 포용국가로 명칭을 변경하여 사회정책 강화를 제시(관계부처 합동, 2019). 2019년 12월 사회정책을 총괄하고 미래비전 수립을 목표로 한 '혁신적 포용국가 미래비전 2045' 발표. 이는 사회정책이 확대되는 계기를 맞음(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경제·인문 사회연구회, 2019).

□ 문재인 정부는 2020년 7월 한국판 종합뉴딜계획을 발표. 이듬해 7월에는 이를 보완한 한국판 뉴딜계획 2.0를 발표.

○사회문제를 해소하려던 정부의 노력은 2020년 상반기 코로나 19 감염병의 범유행으로 새로운 도전을 맞이하게 되면서, 이에 대응하려는 상황에서 뉴딜 계획이 제시됨.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서는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과 더불어 안전망 강화를 주요한 정책 방향으로 제시하면서, 전국민 고용 안전망의 구축과 상병수당의 도입을 제시.

○2021년에 제시된 새로운 뉴딜 2.0에서는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과 함께 휴먼뉴딜이 주요한 축으로 제시됐음. 여기에는 고용 사회 안전망에 더해서 청년 정책과 격차 해소라는 정책 지향이 새롭게 제시됨.

[그림 2-3] 2020년과 2021년 한국판 뉴딜 1.0 및 2.0 계획



자료: (좌) 관계부처 합동 (2020.7.14.)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선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으로 대전환.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우) 관계부처 합동. (2021.7.14.). 한국판 뉴딜 2.0 : 미래를 만드는 나라 대한민국.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포용국가의 비전을 제시하면서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국민들의 삶을 전 생애주기에 걸쳐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점을 명시. 이에 따른 세 가지 방향을 제시.

-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 공정한 기회와 정의로운 결과 보장.
- 국민 단 한 명도 차별받지 않고 함께 잘 살아야.

※ (문재인 대통령, 2018년 9월 6일 포용국가 전략회의 모두 발언에서 발췌)

□ 이와 같은 방향성은 전통적 보편적인 복지국가의 보편성, 포괄성, 급여 충분성, 지속가능성의 측면에서도 부합함.

- 대상자: “국민 단 한 명도 차별받지 않고” “생애주기에 걸쳐”
- 급여: “안심하고 잘 살아갈 수 있어야”
- 전달(인프라): “지속가능성”. “국가가 책임”
- 재원: “국가가 책임”

□ 참고로, 스웨덴의 사회정책학자인 Palme(2021)는 보편적 복지국가의 개념 및 평가의 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 ① 포용(inclusion): 누가 사회보장 제도에 공식적으로 포함되는지, 모든 시민에게 동등한 조건의 열린 혜택을 제공하는지.
- ② 급여(Benefits): 사회 내 모든 집단에 대해 충분한 사회보장 급여가 제공되는지, 일부 집단은 급여가 부족해서 사적 수단에 의존해야 하는지.
- ③ 자원 조달(financing): 사회보장 제도가 공공 혹은 민간 수단을 통해서 조달되는지.
- ④ 전달(provision): 서비스 전달 혹은 보험의 집행 주체가 누구인지, 이러한 공급자가 공공, 시장, 혹은 자원/비영리에 속하는지.

□ 문재인 정부의 포용적 복지국가는 온 국민이 소외됨 없이 고루 누릴 수 있는 사회를 지향. 이를 위해 국가가 필요한 사회정책을 적극적으로 확대해나가는 방향으로 나아갔음. 이를 반영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주요 노력과 결과를 평가함

- ① 필요한 모든 국민들이 사회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가
- ② 사회급여의 내용과 수준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수준인가
- ③ 사회정책의 급여는 효과적이며 공공성 있는 체계를 통해 전달됐는가
- ④ 필요한 재정의 출처가 충분히 공공성, 형평성을 보장했는가

2. 문재인 정부의 포용적 복지국가 정책 추진 결과

1) 대상의 포괄성 강화: 온 국민이 소외됨 없이 고루 누리도록

- (소득보장 강화) 새로운 소득보장제도 도입 및 적극적 제도개선을 통해 보장 대상 대폭 강화
 - (소득지원제도 신설 및 대상자 확대) 최초 보편수당인 아동수당('18.9)을 도입하고, 노인·사회 서비스 일자리 큰 폭 확대(보건복지부, 2022a)
 - 사회서비스 일자리: ('17~18) 5.5만개 → ('21) 31만개
 - 노인일자리: ('17) 49.6만개 → ('21) 82만개
 - 온종일돌봄 수혜 아동: ('17) 24.5만명 → ('21) 44.3만명
 - 노인요양·돌봄 서비스: ('16) 79.9만명 → ('21) 120.7만명 (*전체 노인의 15.4%)
 - (청년 자산형성) 청년 자산형성 지원 강화
 - 기존 사업에 청년희망키움통장('18년, 생계급여), 청년저축계좌('20년, 차상위) 도입
 - (국민취업지원제도) 2021년 1월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 고용보험 - 국민취업지원제도 - 국민기초생활보장으로 구성된 중층적 고용안전망 구축
 -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 여성 등에게 최소한의 생활 안정과 취업지원을 함께 제공
 - 코로나 고용위기 동안 실업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체계적으로 지원
 - '21.12월말 기준 42.3만 명에게 취업지원서비스 지원(전년도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인원의 약 2배 수준), 34.1만 명에게 구직촉진수당 지원(대상자 가운데 청년 61.9%, 여성 55.4%)(고용노동부, 2022.1.25.).
 - 위기 대응을 강화하기 위하여 구직촉진수당을 수급할 수 있는 가구소득(중위 50→60%)·재산(3→4억) 요건 확대, 취업 이력이 있는 청년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취업경험요건 폐지 등 신속한 제도 개선 추진
 - 취업지원 종료자 17만 명의 취업률 66.5% 달성
- (기초보장 대상 확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기준 단계적 완화 로드맵 이행 및 근로 장려금 대상 확보
 - (1단계)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 또는 중증 장애인이 모두 포함('老-老-障-障 부양')된 경우 ('17.11월)
 - (2단계)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18.10월)

- (3단계)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 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수급자가 만 30세 미만 한부모가구 및 보호종료 아동인 경우('19.1월)
 - (4단계)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기초연금 수급자)이 포함된 경우(생계급여 '19.1월*, 의료급여 '22.1월)
 - (5단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21.10월)
-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단계적 폐지 검토 중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주거급여 수급 기준 완화 등의 영향으로 기존에 정체, 감소하던 인구 대비 기초보장 수급률 급등 ('16년 3.2% → '20년 4.1%) (통계청, 2022b; 교육부, 2022)

- (총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16년 163.1만명 → '21년 235만명
- (총 생계급여 수급자) '16년 124.1만명 → '21년 147만명

* 코로나19로 인해 '19년 336.8천 건이었던 긴급복지지원 건수가 '20년 840천 여건으로 급등

○ 근로장려금

- 2018년 세법개정을 통해 근로장려금 수급 요건 대폭 완화
 - (연령요건) 20세 미만 단독가구 배제 → 포함; (재산요건) 가구당 1.4억원 미만 → 가구당 2억원 미만 (소득요건) 1,300~2,500만원 → 2,000~3,600만원; (최대지급액) 85~250만원 → 150~300만원 등
 - 요건 완화로 인해 '16년 157만여 가구에서 '18년 388.5만 가구, '19년 421.4만 가구로 지급가구 급등 (통계청, 2022c)

□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모든 취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 정부 초반부터 계획된 사각지대 해소 및 보장성 강화가 예정대로 시행됨

- 초단시간 근로자는 법의 단서 규정 삭제로 실질적으로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게 되고 구직급여 수급 요건 완화로 실직 시 쉽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됨
- 소득대체율 상향과 구직급여 수급기간 연장으로 다른 선진국에 근접한 수준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됨. 다만, 일 상한을 그대로 둬으로써 소득대체율 상향 조치의 효과는 제한적임

○ 대통령 특별연설 후 발표된 로드맵에 따라 고용보험 당연적용에서 제외된 비임금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을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

- 2020년 12월 10일부터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2021년 10월 기준으로 제도 시행 이전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예술인이 보험 가입
- 2021년 7월 1일부터 12개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기존 산재 적용대상자 수와 비교할 때 적용 확대가 원활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고용보험 가입자 인구는 2016년 1,266만명에서 2021년 1,455만명으로 확대(관계부처합

동, 2021.12.30.)

〈표 2-1〉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 피보험자 현황(2021. 10. 27)

예술인		노무제공자	
구분	피보험자 수	구분	피보험자 수
합계	144,627	합계	553,729
건축	41	가전제품 설치기사	2,516
국악	6,072	건설기계종사자	13,163
만화	5,295	대여제품방문점검원	28,345
무용	3,992	대출모집인	8,396
문학	4,372	방문강사	37,406
미술	7,596	방품판매원	49,854
사진	389	보험설계사	277,494
연극	13,906	신용카드모집인	7,993
연예	41,383	택배기사	43,649
영화	17,993	화물차주	12,735
음악	20,582	방과 후 강사	72,178
기타	23,006		

자료: 근로복지공단. (2021.10.27.).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 피보험자 현황(내부자료).

- 2022년 1월 1일부터 퀵서비스와 대리기사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 전 취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위해 소득정보 인프라 구축 진행

〈표 2-2〉 소득정보 인프라 구축 현황

구 분		주요 추진과제	일 정
일용근로자		▶ 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매분기 → 매월)	‘21.7월~
특고	원천징수형	▶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매반기 → 매월)	‘21.7월~
	사업자등록형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확대 전년도 공급가액 3억원 → 2억원(시행령 既개정) 전년도 공급가액 2억원 → 1억원(시행령 개정사항)	‘22.7월~ ‘23.7월~
		▶ 전자세금계산서 세액공제 신설(‘21년 정기세법)	‘22.7월~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확대(시행령 개정사항)	‘23.1월~
	퀵서비스·대리운전	▶ 과세자료 제출주기 단축(매년 → 매월)	‘21.11월~
		▶ 과세자료 제출대상에 ‘노무제공 플랫폼 사업자’ 추가	‘22.1월~

주: 1)원천징수형: 보험모집인, 대출모집인, 카드모집인, 방문판매원 등(8개)

2)사업자등록형: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차주, 택배기사, 가전제품배송기사(4개)

자료: 조세 및 고용보험 소득정보연계추진단. (2021.12.). 소득정보 인프라 구축 현황(내부자료).

□ 취약계층의 사회정책 수혜 범위 확대

- (장애연금) 수년간 감소·정체 상태에 있던 장애연금 수급자 수가 장애연금 수급범위 확대 조치에 따라 2020년 최초로 8만 명 이상으로 증가(통계청, 2021d)
 - 장애연금 수급자 수: ('10) 79,727명 → ('12) 78,796명 → ('14) 78,038명 → ('16) 78,074명 → ('18) 78,806명 → ('20) 80,983명
- (장애인연금) 목표수급률(중증장애인의 70%)에 미달하던 장애인연금 수급률이 2018년 들어 목표수급률에 도달함(김현지, 김용진, 오윤지, 김태용, 이혜수, 2021).
 - 장애인연금 수급률: ('16) 68.4% → ('17) 69.4% → ('18) 70.0% → ('19) 70.7% → ('20) 72.2%

2) 급여의 적절성 확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도록

- (건강보장성 강화) 70% 건강보험 보장률 + 재난적 의료비 발생 감소를 목표로 문재인 케어('17년 8월 9일 선포)를 꾸준히 추진하여 5년간 30.6조 투자
 - 3대 비급여 해소, MRI·초음파 등 보험적용 확대, 의학적 비급여의 단계적 급여화를 추진하고, 취약계층 부담 대폭 완화
 - ①선택진료비 폐지, ②병원급 이상 2·3인실 건보 적용, ③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 소득 하위 50% 본인부담상한 인하(연소득 10% 수준), 재난적의료비 전체 질환 적용 등
 -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7년 62.7%에서 65.3%로 상승. 문재인 케어에서 당초 제시했던 목표치에는 미달했으나 꾸준한 증가세를 보임(국민건강보험공단, 2021).
 - 비급여 부담률은 2016년 17.2%에서 2020년 15.2%로 감소. 암 환자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2017년 14.5%에서 11.2%로 감소.
-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급여 상향) 기초·장애인 연금 및 기초생활보장 기준중위 소득을 대폭 인상
 - 기초생활보장 기준인 중위소득 대폭 인상: 2022년 4인 가구 기준 기준중위소득을 2021년 기준 487만 6,290원에서 512만 1,080원으로 5.02% 인상. 기준중위소득은 2022년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77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 기준 (중앙생활보장위원회, 2021.7.30.).
 - 기초연금, 장애인 연금 기준액 단계적 인상(관계부처합동, 2021).

- 기초연금: ('17) 20만원 → ('18) 25만원 → ('19) 30만원(20%) → ('21) 30만원(70%)
- 장애인연금: ('17) 20만원 → ('18) 25만원 → ('19)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30만원 → ('21) 전체 30만원

□ (돌봄보장 강화) 아동-노인-장애인 등 대상자별 돌봄 확충 노력

○ (아동) 난임시술 지원, 국공립 어린이집(+2696개)·다함께돌봄(+601개) 확대 등 임신부터 초 등생까지 촘촘한 돌봄체계 구축, 아동보호체계 획기적 강화(보건복지부, 2022a).

- (난임시술) ('17) 건보 미적용→('20) 14.7만건 / (난임·우울증상담센터 이용) ('18) 1천건→ ('21) 2.5만건
- 아동학대대응체계 강화방안 수립('21.1, 조사공공화(전담인력 730명), 즉각분리제 도입 등 포함)
- 유아학비·보육료 지원액의 경우, 국공립유치원에 다니는 유아 대상 급여는 지난 2017년 6만원에서 2022년 10만원으로 증액(교육부, 2022)

○ (노인) 치매국가책임제를 도입하여 치매 노인에 대한 가족 부담을 줄이고, 기존 노인돌봄 사업을 삶터 중심으로 통합하고 응급안전, 쉼터 확충 등 지역사회 돌봄 강화

- 256개 전체 시·군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256개), 치매전문병동(66개) 및 전담요양기관(293개) 설치 등으로 치매환자 50만여 명에 대해 맞춤형 서비스 제공 추진(관계부처합동, 2021)
- 21년 6월 기준 전체 노인 인구 가운데 90.0%가 치매안심센터에 30분 이내에 도달 가능하게 됨. 2017년 12월 기준으로는 비율이 11.2%.
- 제4차 치매관리종합계획('21-'25)를 통해 지속적으로 치매국가책임제 강화 추진
- 치매안심센터 이용자 수(만 명)

2018	2019	2020	2021
128.3	340.5	368.6	396.8(7월)

자료: 관계부처합동. (2021). 문재인 정부 경제분야 36대 성과. p. 164.

- 노인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확대하여 기존 노인돌봄 사업을 삶터 중심으로 통합하고 응급안전, 쉼터 확충 등 지역사회 돌봄 강화
- 노인 맞춤형 돌봄 서비스 대상자는 2020년 43만명에서 2021년 50만명으로 확대. 노인 맞춤형 돌봄서비스 지원 규모 역시 2020년 3728억원에서 2021년 4183억원으로 증액(교육부, 2022)

○ (장애인) 31년 만에 장애등급제를 폐지('19.7)하고 활동지원 및 발달장애인 돌봄 강화, 탈시설 자립지원 등 수요 중심 지원체계 구축(보건복지부, 2022a)

-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 자연증가와 함께 2019년 7월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활동지원 수급자격에서 장애등급(장애 정도)을 폐지함으로써 수급자가 크게 증가(김현지 외, 2021)

•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 ('16) 79,926명 → ('17) 86,926명 → ('18) 94,496명 → ('19) 105,569명 → ('20) 115,017명

• 활동지원 이용자 수: (2017) 72,193명 → (2020) 193,115명

• 활동지원 월평균 지원시간: (2017) 123시간 → (2020) 130시간

• 활동지원기관 수: (2017) 964개 → (2020) 1,008개

• 활동지원사 수(활동인원): (2017) 62,629명 → (2020) 84,854명

- 발달재활 서비스: 2019년부터 발달재활 서비스의 소득기준을 '전국가구평균소득 150% 이하'에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로 변경함으로써 수급범위 확대

• 발달재활 서비스 수급자: ('16) 52,200명 → ('17) 52,830명 → ('18) 55,802명 → ('19) 62,361명 → ('20) 60,410명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과 지역사회재활시설은 지속적으로 증가함. 2017~2020년에 걸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복지관(237→258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690→797개) 등을 지속적으로 확충

• 장애인 거주시설 및 현원: (2017) 1,517개소/30,693명 → (2020) 1,539개소/29,086명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및 현원: (2017) 625개소/17,841명 → (2020) 720개소/19,734명

•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수: (2017) 1,333개 → (2020) 1,519개

○ 국공립어린이집, 치매안심센터, 장애인활동지원 확대 등 공적책임을 강화하여 개인·가족에게 맡겨져 있던 돌봄 부담을 완화

□ (모성보호 급여 확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급여의 대폭적인 확대와 첫만남이용권 신설 (고용노동부, 2021b)

○ 출산휴가급여는 산전후 90일로 동일하지만, 출산휴가급여의 상한액은 지속적으로 상향

- ('16) 135만원 → ('17) 150만원 → ('18) 160만원 → ('19) 180만원 → ('20) 200만원

○ 육아휴직급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에게 자녀 1명당 1년으로 동일하지만, 육아휴직의 활용률 제고를 위해 첫 3개월간 육아휴직 급여 2배 인상,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상한액 인상

- 육아휴직 첫 3개월간 육아휴직 급여액: 소득대체율 40 → 80%('17.9.1.)

- 아파육아휴직 보너스 제 상한액 인상: 150만원→200만원('18)→250만원('19)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하는 모든 아동에게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200만원 바우처를 지급
 - 국민행복카드에 일시금 200만원 충전(1회)하는 방식으로 2022년 4월 1일부터 지급 예정
 - 출생일로부터 1년 내 사용

〈표 2-3〉 최근 5년간 모성보호 육아지원 사업 제도 개선

시행	주요내용
2017.1.	출산휴가급여 상한액 인상(135만원→150만원)
2017.7.	아빠의 달 급여 인상(둘째 자녀에 대한 상한액 인상, 150만원→200만원)
2017.9.	육아휴직 첫 3개월간 급여 2배 인상(소득대체율 40→80%, 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
2018.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인상(소득대체율 60→80%) 출산휴가급여 상한액 인상(150만원→160만원)
2018.7.	아빠의 달 급여 인상(상한액 인상, 150만원→200만원)
2019.1.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의 급여 인상(소득대체율 40→50%, 상한 120만원, 하한 70만원) 출산휴가급여 상한액 인상(160만원→180만원) 아파육아휴직보너스제 상한액 인상(200만원→250만원)
2019.10.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제도개선 (육아휴직 제도와 별개로 사용 가능, 사용기간 최대 2년까지 연장, 통상임금의 100%) 배우자출산휴가 확대(유급 10일)
2020.1.	출산휴가급여 상한액 인상(180만원→200만원)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 금액 고시(상한액 382,770원)
2020.2.	부부 동시 육아휴직 허용 및 육아휴직급여 지급
2020.3.	비자발적 퇴사시 사후지급금 지급 및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인상 (첫 3개월 100% 상한(250만원), 4~6개월(상한 150만원), 7개월 이후 50%(상한 120만원))
2022.1.	3+3 부모육아휴직제, 첫만남이용권 지급

자료: 1) 윤동열 외. (2021). 고용보험기금 사업 효율화 방안 검토. p. 140.

2) 고용보험 홈페이지, 육아휴직(부부동시). <https://www.ei.go.kr/ei/eh/eg/pb/pbPersonBnef/retrievePb0302Info.do> 에서 2022.1.27. 인출.

□ (실업자를 위한 급여 인상) 노동권과 쉼 권리 보장을 위해 실업급여 확충,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 실업급여의 보장성 강화 및 지급 기간 연장. OECD 주요국 수준으로 조정

- 2019년 10월부터 실업급여의 수준을 실업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 실업급여의 지급 기간도 90~240일에서 120~270일로 연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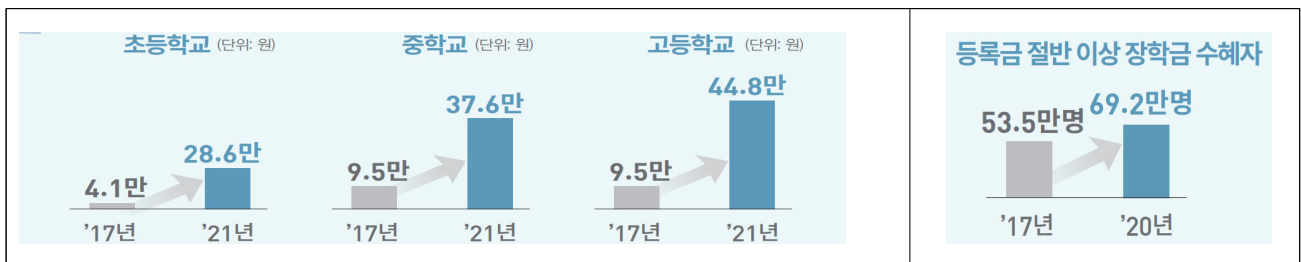
○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도입을 통해서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구직자, 미취업 청년, 폐업한 영세자영업자 등 취업취약계층의 생계안정 도모. 구직촉진수당 50만원 지급

□ (교육비 경감) 교육과 복지 영역의 선순환을 위해 교육 기회 확대(교육부, 2022)

○ 고등학교 무상교육 단계적 시행. 2021년 고교 전학년 124만으로 확대.

- ('19년 2학기) 고3→('21) 전학년. 고등학생의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지원
- 교육급여 대폭 상승으로, 저소득층 학부모의 학비 부담을 완화
 - 초등학생은 2017년 4.1만원 → 2021년 28.6만원, 중학생은 같은 기간 9.5만 → 37.6만원.
- 국공립대 입학금을 2018년에 전면 폐지. 대학 등록금 지원을 확대해서, 등록금 절반 이상 장학금 수혜자의 수가 ('17년) 53.5만명→('20) 69.2만명으로 증가

[그림 2-4] 교육급여액 변화 및 장학금 수혜 인원 변화



자료: 교육부. (2022). 사회정책 5개년 성과 자료집. p. 22.

3) 전달체계의 공공성 강화: 효과적이고 안정적으로 급여가 국민들에게 전달되도록

- (사회서비스 인프라) 전국 시도에 사회서비스원을 설치하고('19. 4개소→'22. 17개소),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돌봄 모델 구축을 위한 선도사업 실시(16개 시군구) 등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공공성 강화 추진(교육부, 2022)
- 시도에 사회서비스 전달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사회서비스원 신설 추진

〈표 2-4〉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추이

	2019	2020	2021
설치 시도 수(개)	4 (서울, 대구, 경기, 경남)	11 (인천, 광주, 대전, 세종, 강원, 충남, 전남)	14 (울산, 전북, 제주)
국공립시설 운영	31	-	70
종합재가센터 설치	10	-	29

자료: 1) 보건복지부. (2019.3.6.). 사회서비스원, 서울·대구·경기·경남에서 최초 설립·운영.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347990&page=1 에서 2022.1.27. 인출.

2) 2021년: 사회서비스 중앙지원단 홈페이지에 제시된 시도사회서비스별 현황을 합산하여 작성함. (<https://www.pass.or.kr/social-servicecenter-introduction-state/index/sido> 에서 2022.1.27. 인출)

- (지역사회통합돌봄) 2019년 9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총 21,570명을 발굴하여 초기 상담 시행, 통합돌봄이 필요한 19,958명에게 서비스 제공, 일상생활지원, 건강의료, 주거, 돌봄요양 등 인당 평균 2.9개의 프로그램과 3.6건의 자원 연계(정부 정책 브리핑 홈페이지, 2021.11.17.)
 - (국비지원액) 2019년 79.7억 원 → 2021년 181.9억 원
 - 19년 시범사업부터 21년 6월까지의 진행 성과: 전담부처 설치, 통합돌봄창구 설치(지자체 당 평균 25개), 총 806개 민간기관과 협약(지자체별 평균 32개)
- (지역보건의료 공공성 강화) 공공·지역보건의료 확충 전략을 순차적으로 수립하여 관련 투자를 확대하고, 감염병 대응역량 제고(보건복지부, 2022a)
 - 공공·지역 보건의료 투자 확대: '16. 4,892억원→'21. 6,724억원
 - 공공·지역 보건의료 확충 전략 마련: 공공의료 대책('18.10)·강화방안('20.12), 지역의료 대책('19.11), 2차 공공의료 기본계획('21.6)
 - 중앙('17)·권역감염병전문병원 지정('17~'21, 4개), 시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설치('20)
- (예방·정신건강) 생애주기별 건강관리·검진 강화 및 금연·절주 등 건강위해요인 관리, 소국민 정신건강복지 기틀 마련(보건복지부, 2022a)
 -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19), 신생아기 필수검진('21), 주민건강센터(('17) 55 → ('20) 120개소) 등
 - 자살예방전담부서 신설(18),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21), 국가·권역 트라우마센터(신규 5개소)
- (돌봄·보육) 국·공립 돌봄기관을 확대하여 유치원·어린이집에 대한 학부모의 신뢰를 높이고 방과후돌봄기관 확대로 사각지대 축소(교육부, 2022)
 - 국공립어린이집이 ('16년) 2,859개 → ('19) 4,324개 → ('21) 5,424개로 지속적으로 증가. 공공보육 이용률도 ('16년) 22.6% → ('19) 28.2% → ('21) 35.3%로 증가
 - 방과후 돌봄: 초등 돌봄교실과 마을돌봄기관을 확대하여 돌봄 사각지대 해소 추진

(단위: 만 명/ 개소)

	2017	2018	2019	2020	2021
이용자수	33	36	40	42	44
학교돌봄교실수	11,980	12,398	13,910	14,278	14,774
마을돌봄시설수	4,357	4,487	4,670	4,836	5,294

자료: 1) 정부업적평가홈페이지. 100대 국정과제. https://www.evaluation.go.kr/psec/np/np_2_1_2.jsp에서 2022.1.27. 인출.

2) 교육부. (2021). 온종일돌봄추진단(내부자료).

○ 읍면동 찾아가는 복지 전담팀 구성(보건복지부, 2022a)

- 전국 3,491개 읍면동에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확산을 위해 전담팀을 구성하고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및 방문간호 인력 확대 채용

○ 치매보호의 공공성 강화: 치매안심센터 설치 (보건복지부, 2022a)

- 256개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관련 시설 확충

○ 아동보호체계의 공공성 강화(보건복지부, 2022a)

- 아동보호전담요원 715명, 전담공무원 765명 배치

□ (사회보장 체감도 제고)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21.9~), 위기가구 발굴 등 국민 체감 제고. 실시간소득파악시스템 구축 중(보건복지부, 2022a)

-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국민의 복지체감도 및 사회복지 현장의 업무 효율성 향상 시도. 2021년 9월 1차 개통을 통해서 복지멤버십 일부 및 복지로 개통

- 위기가구 발굴 대책을 두 차례 걸쳐 발표 (2018년 7월, 2019년 9월) 위기가구 발굴 건수를 ('17) 8만 → ('21.9) 48만명으로 확대.

- 찾아가는 상담: ('17) 225만 → ('21.9) 311만건으로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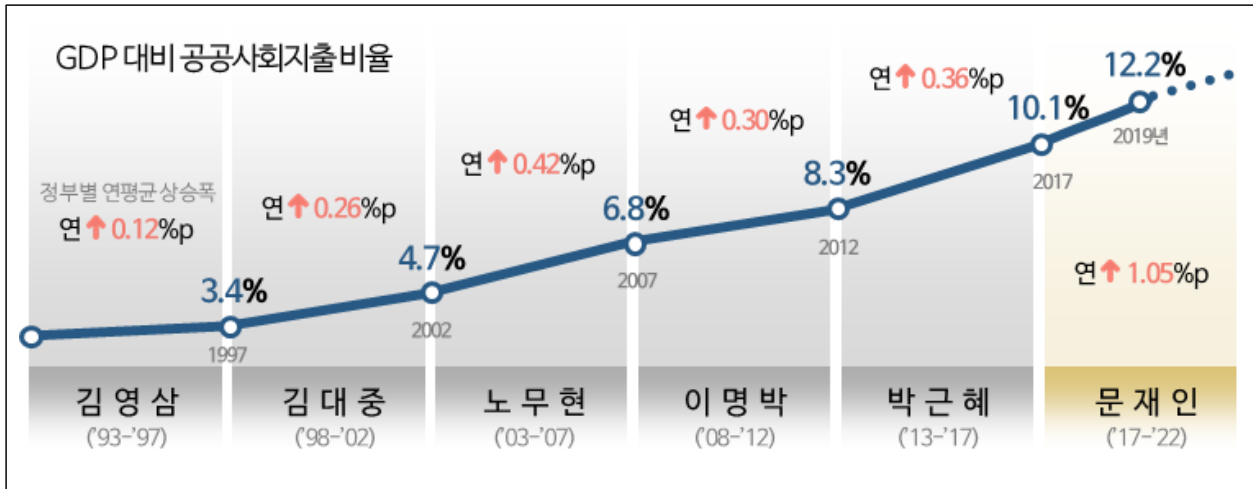
4) 공공재정 투입 증대: 부담은 다 같이, 공정하게 나누도록

- 문재인 정부가 집권한 2017년 이후 공공 사회지출액 수준은 가파르게 증가함. 지난 2017년 GDP 대비 10.1% 수준에서 2019년 12.2%로 2년 사이 2.1% 포인트 증가(통계청, 2021e)

- 앞선 보수정권 집권 기간 10년 동안 (2008~2017년) 공공 사회지출 비율 증가 수준 (7.3%에서 10.1%로 2.8% 포인트 증가)에 육박하는 수준임.

- 지난 1997~2007년 사이 김대중 정부(1997~2002년 3.4% → 4.7%, 1.3% 포인트 증가), 노무현 정부(2002~2007년 4.7% → 6.8%, 1.9% 포인트 증가)의 증가 수준보다도 높음.
- 사회보험의 성숙화가 한 원인으로 풀이되지만, 정부가 적극적으로 공적이전소득을 꾸준히 강화한 결과로 풀이됨.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인상 등에서 이와 같은 경향이 관찰됨.

[그림 2-5] 역대 정권의 GDP 대비 공공사회지출 비율 변화 추이



자료: OECD. (2022e). Social Expenditure Database (SOCX)를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 건강보험 지출액이 2017년 62.0조원에서 2020년 80.2조원으로 크게 증가하는 등 현물지출의 절대액도 꾸준히 증가했지만, 아동수당 도입 등을 포함한 공적이전지출의 강화의 결과로 풀이됨.
- 2020년 현금 지출 비율은 당시 재난지원금 지원액은 제외한 수치. 재난지원금을 포함할 경우, 현금의 비율은 46.1%까지 증가함.
- 공공지출은 분야로 나누었을 때 보건·복지·고용 부분은 절대액이 빠르게 증가했을 뿐 아니라 전체 지출에서의 비중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12대 분야 지출	보건·복지·고용(조원)	106.4	115.7	123.4	129.5	144.7	161.0	180.5	199.7
	보건·복지·고용(%)	29.8	30.6	31.7	32	33.4	34.0	34.8	35.6
16대 분야별 지출	사회복지 분야(조원)	97.2	105.3	112.9	119.1	133.8	148.9	167	185
	사회복지 분야(%)	27.3	28.1	29.2	29.7	31.2	31.7	32.6	33.2
	보건 분야(조원)	9.2	10.4	10.5	10.4	10.9	12.1	13.5	14.7
	보건 분야(%)	2.6	2.8	2.7	2.6	2.5	2.6	2.6	2.6

자료: 열린재정(재정정보공개시스템) 홈페이지. <https://www.openfiscaldata.go.kr/op/ko/index> 에서 2022.1. 27. 인출.

□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 건보 보장성 강화 대책('17.8)의 충실한 이행으로 가계 병원비 부담을 완화('17.9~'22., 30.6조원 계획)하며, 건보재정도 견실히 운영(보건복지부, 2022a)

○ 건강보험료율 인상률:

(목표) 지난 10년('07~'16년) 평균 3.2% 內 에서 조정(보건복지부, 2022a)

(실제) 연평균 2.70% ('18 2.04% → '19 3.49% → '20 3.20% → '21 2.89% → '22 1.89%)

○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 및 취약계층 급여 기준 확대를 통해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교육부, 2022)

- 유방·흉부 초음파 검사('21.4월), 심장 초음파 검사('21.9월) 등의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 → 민간 재원인 국민의 사적 부담을 공공 재원을 통해 보장하는 것으로 전환한 대표적 사례
- 산정특례 대상 희귀 질환 확대('21.1월), 장애인 보조기기 기준 금액 인상 및 사용 빈도 높은 소모품 추가('21.3월), 난임 시술 급여 기준 확대('21.11월) 등으로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 경감

III

문재인 정부 사회정책의 성과

1. 복지국가의 구조적 체계 완비 및 내실화

〈표 3-1〉 사회적 위험에 따른 제도별 개선 내용(대상, 급여, 자원, 인프라를 기준으로)

구분	사회적 위험	제도	대상	급여	자원	인프라
소득보장	노령	국민연금	(가입) 정규직: 85.0% → 88.8% 비정규직: 36.6% → 38.4 (2017~2021 기준) (수급: 전체) 438.5만명 → 561.6만명 (수급: 65세이상) 261.4만명(37.4%) → 390.4만명(45.4%) (2016→2020년)	(연평균 노령연금 급여액) 4,117천원 → 5,616천원 (2016→2020년)	(사회보험료) 고용주 4.5%, 근로자 4.5%(자영자 9%) (지급총액)	국민연금공단,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65세 이상) 456.4만명(65.2%) → 583.5만명(68.1%) (2016년→2021.4월 기준)	(단독기준) 20.4만원(중위12%) → 30만원(중위16%) (2016→2021년)	일반 조세	
	실업	고용보험	고용보험 가입자수 1,266만명(2016) → 1,456만명(2021)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건수 59.1만(2017) → 100.5만(2020)	실업급여 급여 수준: 평균임금 50%(2018) → 60%(2020) 지급기간 90~240일(2018) → 120~270일(2020) 출산휴가급여 상한 135만원(2016) → 200만원(2020)	(사회보험료) 고용주 0.8%, 근로자 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보험 소득정보 인프라 구축 - 피보험자 관리 이관(고용부-)>근로복지공단 - 중형고용센터 32개소, 출장소 40개소 2020년 개소
		국민취업지원제도(2021년 도입)	22.7만명(취업성공 패키지) → 42.3만명(국민취업지원제도, 2021년 기준)	구직촉진수당 6개월 동안 50만원 지급. 2022년부터 50만원 조기취업성공수당 지급	(일반 조세)	
	산재	산재보험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 가입률 12.0% → 99.9% (2017~2021)		고용주 부담 (사업종류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적용)	중대재해처벌법 적용(2022년)
	장애	장애연금	장애연금 수급자 78,402명 → 80,983명 (2017~2020)	장애연금 평균급여액(월) 438,640원 → 460,704원 (2017.5.~2021.5.)	GDP 대비 장애인 소득보장 지출 0.331% → 0.338% (2017~2018) *OECD SOCX	

구분	사회적 위험	제도	대상	급여	재원	인프라
		장애인연금	장애인연금 69.4%(2017) → 72.2%(2020)	장애인연금 기초급 여액(월) 206,050원 → 307,500원 (2017~2021) 2018~2021년에 걸쳐 21만원 → 25만원 → 30만원 인상	(public / incapacity related / cash)	
	빈곤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157만가구(2016) → 468만가구(2020) (자녀장려금)102.7만가구 → 69.9만가구 (2016년→2019년)	(총지급액) (근로장려금) 11,416억원 → 4,214억원 (자녀장려금) 5,428억원 → 6,017억원 (2016→2019년)	(일반조세) 지급액과 동일	국세청
		기초보장	174만명(2018) → 235만명(2021)	기준중위소득 인상 4인기준 446.7만원(2017) → 512.1만원(2022)	(일반조세) 118,807억원 → 183.823억원 (2016→2021년)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건강보장	질병	건강보험	건강보험 적용 인구 5094만 → 5134만 (2017~2020 기준)	건강보험 보장율 62.7% → 65.3% (2017~2020 기준) 암환자 비급여 본인부담율 14.5% → 11.2% (2017~2020 기준)	건강보험 지출 62.0조원(2017) → 80.2조원 (2020)	공공의료기관 221개(2017) → 222개(2020) 공공병상 비율 10.2%(2017) → 9.7%(2020)
		의료급여	대상자 149.8만명(2017) → 150.8만명 (2020)	수급자 1인당 급여액 474.9만원(2017) → 600.7만원(2020)	예산액 5.6조원(2018) → 7.0조원 (2020)	보건소, 보건지소 등의 수 3531 → 3571 (2017~2020 기준)
서비스	아동돌봄	유아교육보육서비스	보육아동수 145.0만명(2017) → 124.4만명 (2020)	누리과정지원 단가 22만원(2017) → 26만원 (2021) 유아학비·보육료 지원액 6만원(2017) → 10만원(2022)	누리과정 지원 예산 3.94조원(2017) → 3.99조원(2020)	공보육 이용률 24% (2017) → 32% (2020)
		방과 후 돌봄	온종일돌봄 이용자 수 24.5만명(2017) → 44.3만명 (2021)			국공립 어린이집 2,859개(2016) → 5,424개(2021) 학교 돌봄 교실 수 11,980개(2017) → 14,774개(2021) 마을돌봄기관 수 4,357개소(2017) → 5,294개소(2021)
		아동수당	아동수당 수혜인원 195.1만명(2018. 도입) → 248만명(2021)			

구분	사회적 위험	제도	대상	급여	재원	인프라
	노인 돌봄	장기요양	노인요양·돌봄 서비스 79.9만명(2016) → 120.7만명(2021)	급여 제공 일수 1229만일(2017) → 1733만일 (2020)	급여 비용 5.8조원(2017) → 9.8조원(2020)	급여제공기관 1.94만개(2017) → 2.36만개 (2020)
		치매	인지지원 등급자 1.12만명(2017) → 1.91만명 (2020)	치매 진단 검사 비용 8만원(2017) → 15만원 (2019)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 126만원(2017) → 54만원 (2020)	치매안심센터 2019년 256곳 개소
장애인 돌봄	장애인 돌봄	장애인 활동지원	활동지원 이용자 수 86,926명 → 115,017명 (2017~2020)	활동지원 월평균 지원시간 123시간 → 130시간 (2017~2020)		활동지원기관 수 964개 → 1,008개 (2017~2020) 활동지원사 수(활동인원) 62,629명 → 84,854명 (2017~2020)
		발달재활 서비스	발달재활 이용자 수 52,830명 → 60,410명 (2017~2020)	발달재활 급여액 (월) 22만원 → 급여액 변화 없음		발달재활 제공기관 1,882개 → 2,197개 (2017~2020) 발달재활 제공인력 수 5,398명 → 5,380명 (2017~2020)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현원 30,693명 → 29,086명 (2017~2020)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현원 17,841명 → 19,734명 (2017~2020)	직업재활시설 근로 장애인 월평균 임금 56.7만원 → 61.7만원 (2017~2019) ※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 52.7만원으로 감소		장애인 거주시설 수 1,517개 → 1,539개 (2017~2020)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수 1,333개 → 1,519개 (2017~2020)
기타 서비스 영역	기타 서비스 영역	지역사회 통합돌봄	2019년 16개 선도 지역 선정		국비지원액 79.7억원(2019) → 181.8억원(2021)	2021년까지 806개 민간기관과 협약
		사회서비스원		코로나19로 돌봄 공백이 발생하자, 긴급돌봄을 수행	예산 49.6억원(2019) → 134.4억원(2021)	국공립시설 31개소 (2019) → 70개소 (2021) 종사자 수 1740명 (2017)
		공공 임대주택			주택도시보증기금운용액 49.6억원(2019) → 134.4억원(2021)	
		서비스 접 근성 향상				위기가구 발굴 8만명(2016) → 48만명(2021) 찾아가는 상담 225만건(2016) → 311만건(2021)

구분	사회적 위험	제도	대상	급여	재원	인프라
기 타	교육	교육급여		교육급여 4.1만원 (2016) → 33.1만 원(2022)		
		국가장학금	등록금 절반 이상 장학금 수혜자 53. 5만명(2017) → 6 9.2만명(2020)			
	휴식·여가	주52시간	300인 이상 사업장 (2018) → 5인 이 상 사업장(2021) 적용 사업장 수 0.4 만(2018) → 10.4 만(2021)			
		여가		평일 하루 평균 여 가시간 3.5시간(20 19) → 3.8시간(20 21)		

□ 문재인 정부는 사회적 위험이 존재했음에도 제도는 불비했던 영역에서 복지국가의 빈자리를 채우면서, 보편적 복지국가의 외형적, 구조적 체계를 완비했음.

- 한국은 1990년대 이후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했으나, 아동수당, 상병수당, 실업부조는 한국 복지국가의 ‘missing puzzle’이었음.
- 아동수당(2018년), 국민취업지원제도(2021년), 상병수당(2022년 시범사업 시작)을 통해서 사회적 안전망을 빈자리 없이 구성하는 데 성공

□ 기존의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채우면서 사회보장의 내실화에도 기여함.

-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크게 해소. 전국민고용보험의 비전을 제시하고, 문화예술인(2020년), 12개 업종 특수고용노동자(2021년)를 포괄. 전국민 적용을 위한 소득파악체계 개편 진행.
- 정규직의 국민연금, 건강보험이 적용률은 90% 이상 확장하면서 보편주의의 적용. 비정규직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적용 비율도 확장(국민연금 36.6% → 3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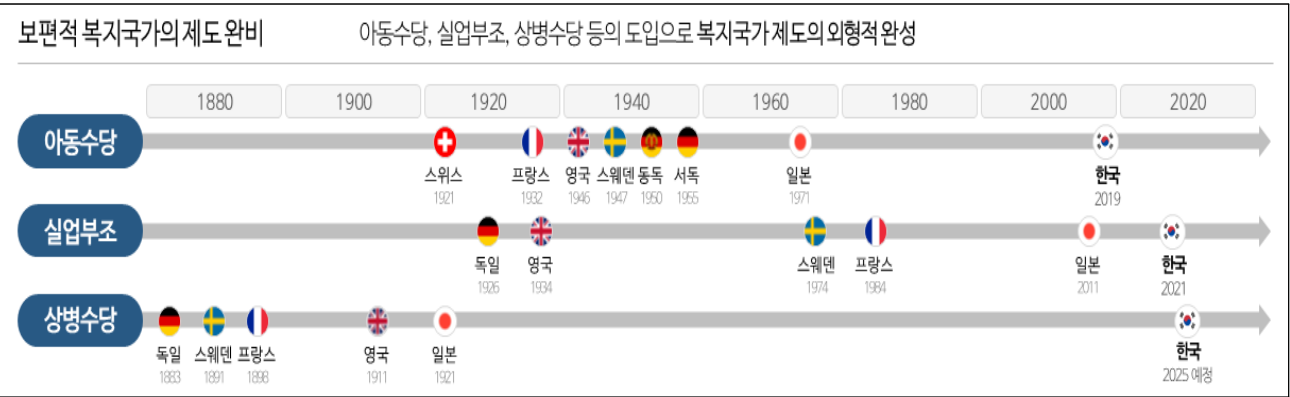
[그림 3-1] 복지국가 서비스 분야에서의 구조적 완비



자료: 연구진 작성.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2018년 폐지하고,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2021년 폐지.
- 근로장려세제도 소득 요건 및 재산요건을 대폭 완화하면서, 수급 대상 저임금 근로자를 157만 가구에서 422만 가구까지 확대.

[그림 3-2] 한국 복지국가의 제도적 완비 과정



자료: SOCX, MISSOC 자료 등을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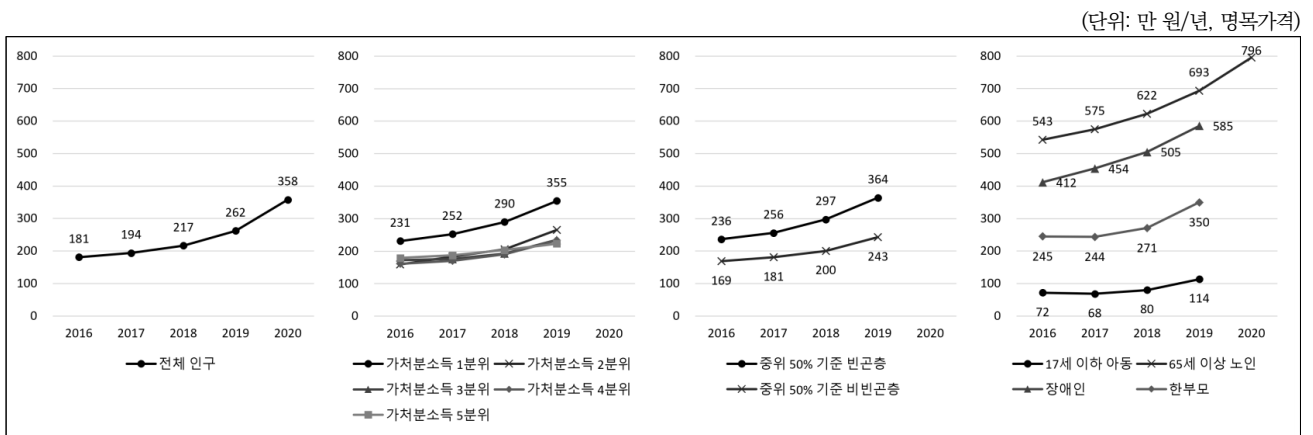
2. 공적이전 확대를 통한 소득 안정성 확보²⁾

□ 소득보장제도 확대와 공적이전소득 증가

○ 2016년 이후 소득보장제도 확대에 따라 공적이전소득이 꾸준히 증가해왔음.

- 전체 인구의 균등화 공적이전소득 평균은 2016년 연간 181만 원에서 2020년 연간 358만 원으로 증가하였음.
- 소득1분위, 빈곤층, 노인, 장애인의 공적이전소득이 상대적으로 크고 빠르게 증가하였음.

[그림 3-3] 공적이전소득 평균



주: 가구소득을 가구원 수 제곱근으로 나누어 균등화한 후 개인 단위로 분석함.

자료: 1) 통계청. (2016~2019).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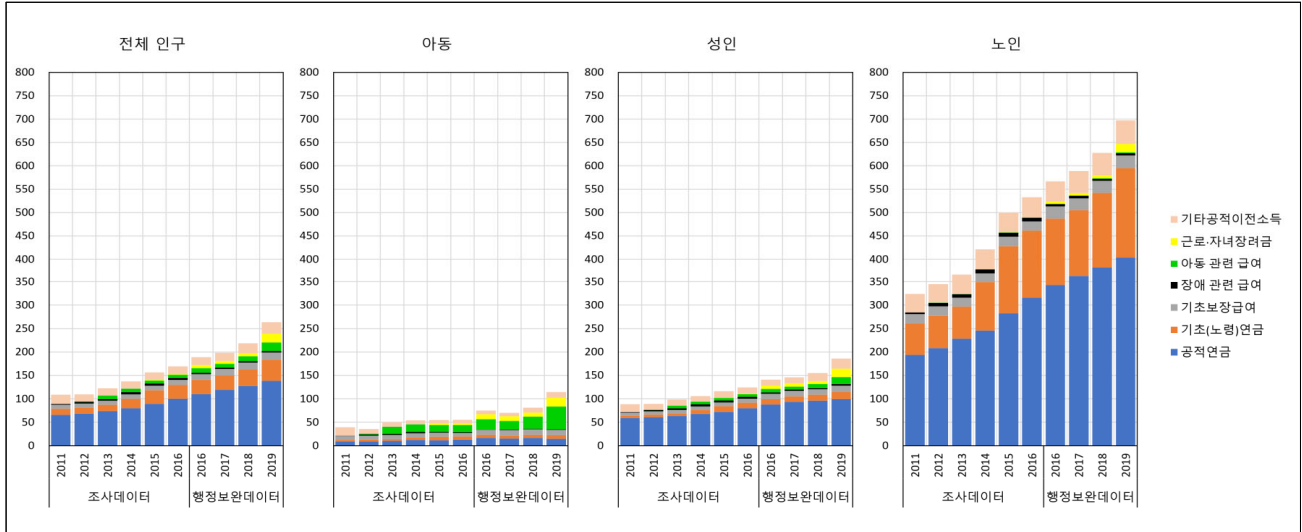
2) 2020년 전체 인구: 통계청. (2021f). 가계금융복지조사: 소득분배지표.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HDLF05&conn_path=I2 에서 2022.3.31. 인출.

3) 2020년 65세 이상 노인: 통계청. (2021g). 가계금융복지조사: 소득분배지표(연령계층별).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HDLF06&conn_path=I2 에서 2022.3.31. 인출.

2) 다음 보고서의 내용을 반영함. 이원진, 김현경, 함선유, 하은솔. (2021). 한국 소득분배 추이와 영향요인.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그림 3-4] 공적이전소득 항목별 평균

(단위: 만 원/년, 2020년 실질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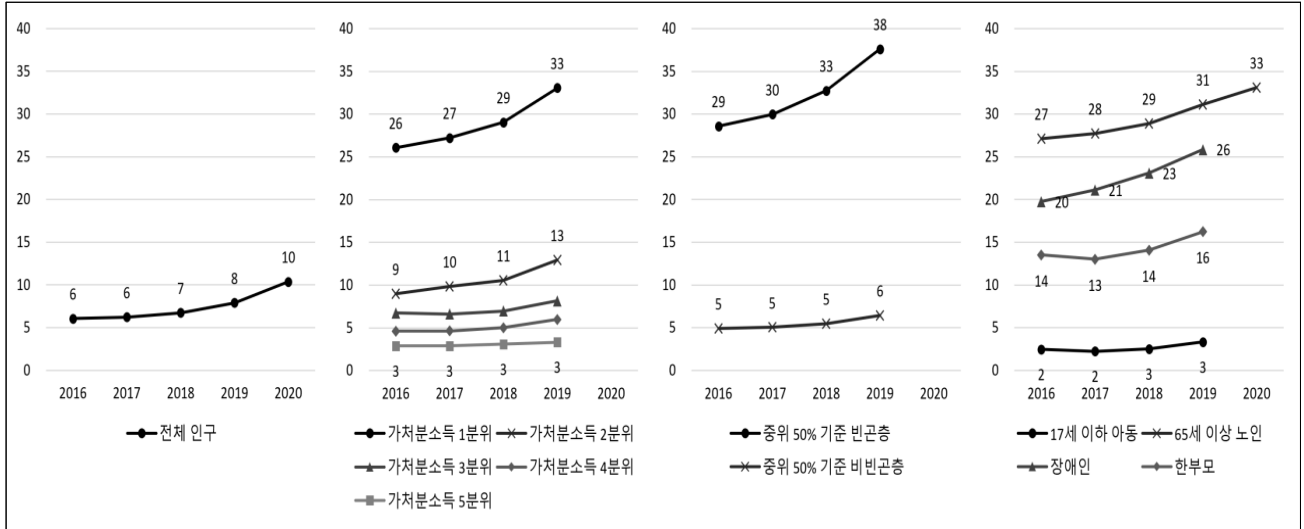
주: 균등화 가구소득의 개인단위 분포임. 아동 관련 급여는 2012년부터, 근로·자녀장려금은 2015년부터 개별 항목으로 조사되었기 때문에 연도별로 기타 공적이전소득의 범위에 차이가 있음.

자료: 이원진, 김현경, 함선유, 하은솔. (2021). 한국 소득분배 추이와 영향요인. p. 188.

- 국민연금의 꾸준한 성숙, 2018년 이후 기초연금 인상, 2018년 아동수당 시행, 2019년 근로장려금 확대 등이 공적이전소득 증가를 견인하였음.
 - 기초연금: 2014년 월 20만 원, 2018년 월 25만 원, 2019~2021년 단계적으로 월 30만 원
 - 양육수당 및 아동수당: 2013년 전체 소득계층 만 5세 이하 양육수당 확대, 2018년 하위 90% 만 6세 미만 아동수당 시행, 2019년 전체 소득계층 만 7세 미만 아동수당 확대
 -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2019년 연령·소득·재산 조건 완화 및 급여액 인상
- 가구소득에서 공적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크게 증가하였음.
 - 전체 인구의 균등화 가처분소득 평균 대비 균등화 공적이전소득 평균 비율은 2016년 6%에서 2020년 10%로 증가하였음.
 - 소득1분위, 빈곤층, 노인, 장애인의 가구소득에서 공적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고 빠르게 증가하였음.

[그림 3-5] 공적이전소득 평균÷가처분소득 평균

(단위: %)



주: 가구소득을 가구원 수 제곱근으로 나누어 균등화한 후 개인 단위로 분석함.

자료: 1) 통계청. (2016~2019).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2) 2020년 전체 인구: 통계청. (2021f). 가계금융복지조사: 소득분배지표.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HDLF05&conn_path=I2 에서 2022.3.31. 인출.

3) 2020년 65세 이상 노인: 통계청. (2021g). 가계금융복지조사: 소득분배지표(연령계층별).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HDLF06&conn_path=I2 에서 2022.3.31. 인출.

3. 양극화 및 불평등 완화³⁾

□ 가처분소득 분배의 점진적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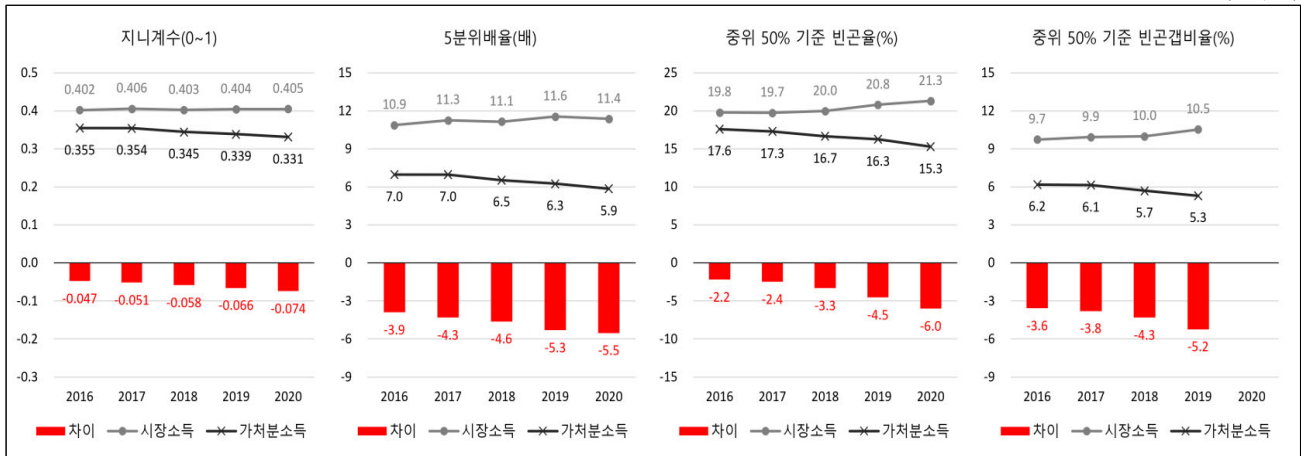
○ 2016년 이후 시장소득 분배가 소폭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보장제도 확대에 의해 가처분소득 분배가 점진적으로 개선되었음.

- 2016~2020년 시장소득 지니계수, 5분위배율, 빈곤율은 각각 0.402에서 0.405로, 10.9배에서 11.4배로, 19.8%에서 21.3%로 증가하였음.
- 2016~2020년 가처분소득 지니계수, 5분위배율, 빈곤율은 각각 0.355에서 0.331로, 7.0배에서 5.9배로, 17.6%에서 15.3%로 감소하였음.

3) 다음 보고서의 내용을 반영함. 이원진 외. (2021) 한국 소득분배 추이와 영향요인.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그림 3-6] 전체 인구 소득분배지표

(단위: %)



주: 가구소득을 가구원 수 제곱근으로 나누어 균등화한 후 개인 단위로 분석함. 빈곤선은 가처분소득 중위값의 50%임. 빈곤갭비율은 총빈곤갭을 인구 수와 빈곤선의 곱으로 나눈 값임.

자료: 1) 통계청. (2016~2019).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2) 2020년 : 통계청. (2021f). 가계금융복지조사: 소득분배지표.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HDLF05&conn_path=I2 에서 2022.3.31. 인출.

□ 인구집단별 빈곤율 및 빈곤갭 비율 변화

○ 아동: 2018년까지 시장소득 빈곤율보다 가처분소득 빈곤율이 높았으나, 2019년부터 시장소득 빈곤율보다 가처분소득 빈곤율이 낮아졌음. 또한, 가처분소득 기준 빈곤율이 2020년 처음으로 10% 이하로 떨어짐.

- 아동수당 시행, 근로장려금 확대 등에 따라 복지국가가 아동 빈곤율을 감소시키기 시작하였음.

○ 노인: 시장소득 빈곤율이 감소하지 않았지만, 노후소득보장제도 확대 덕분에 가처분소득 빈곤율이 감소하였음.

- 특히, 2020년에는 드디어 노인 빈곤율이 40%대에서 30%대로 진입하였음. 빈곤갭비율 역시 감소 추세임.

○ 장애인: 공적이전의 장애인 빈곤감소효과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소득 빈곤율이 크게 증가하여 가처분소득 빈곤율이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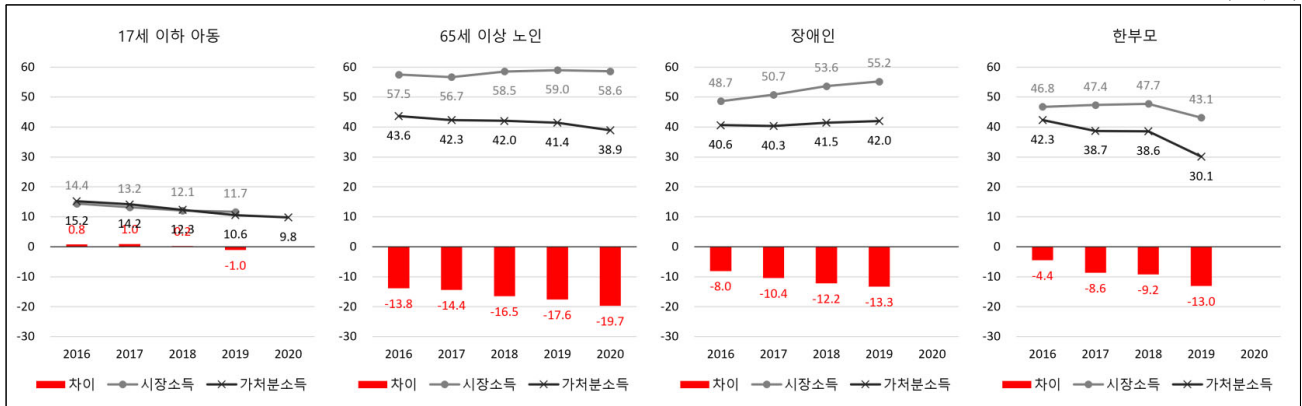
- 장애인 빈곤율은 노인 빈곤율과 대체로 유사한 수준이나, 최근 노인 빈곤율 감소 추세와 달리 장애인 빈곤율은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음.

- 단, 장애인 빈곤갭비율은 2016~2018년 15.0~15.1%에서 2019년 13.9%로 소폭 감소하였음.

○ 한부모: 시장소득 빈곤이 완만하게, 가처분소득 빈곤이 좀 더 빠르게 감소하고 있음.

[그림 3-7] 인구집단별 빈곤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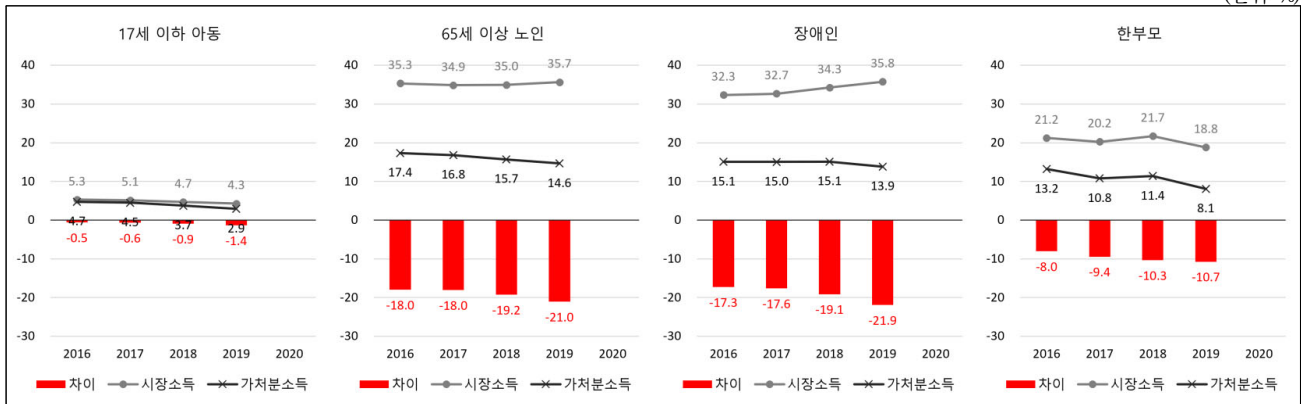
주: 가구소득을 가구원 수 제곱근으로 나누어 균등화한 후 개인 단위로 분석함. 빈곤선은 가처분소득 중위값의 50%임. 한부모는 부모가 한 명이고 18세 미만 미혼자녀가 있는 가구를 의미함.

자료: 1) 통계청. (2016~2019).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2) 2020년 : 통계청. (2021g). 가계금융복지조사: 소득분배지표(연령계층별).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HDLF06&conn_path=I2 에서 2022.3.31. 인출.

[그림 3-8] 인구집단별 빈곤갭비율

(단위: %)



주: 가구소득을 가구원 수 제곱근으로 나누어 균등화한 후 개인 단위로 분석함. 빈곤선은 가처분소득 중위값의 50%임. 빈곤갭비율은 총빈곤갭을 인구수와 빈곤선의 곱으로 나눈 값임. 한부모는 부모가 한 명이고 18세 미만 미혼자녀가 있는 가구를 의미.

자료: 통계청. (2016~2020).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 인구집단별 빈곤율 및 빈곤갭 비율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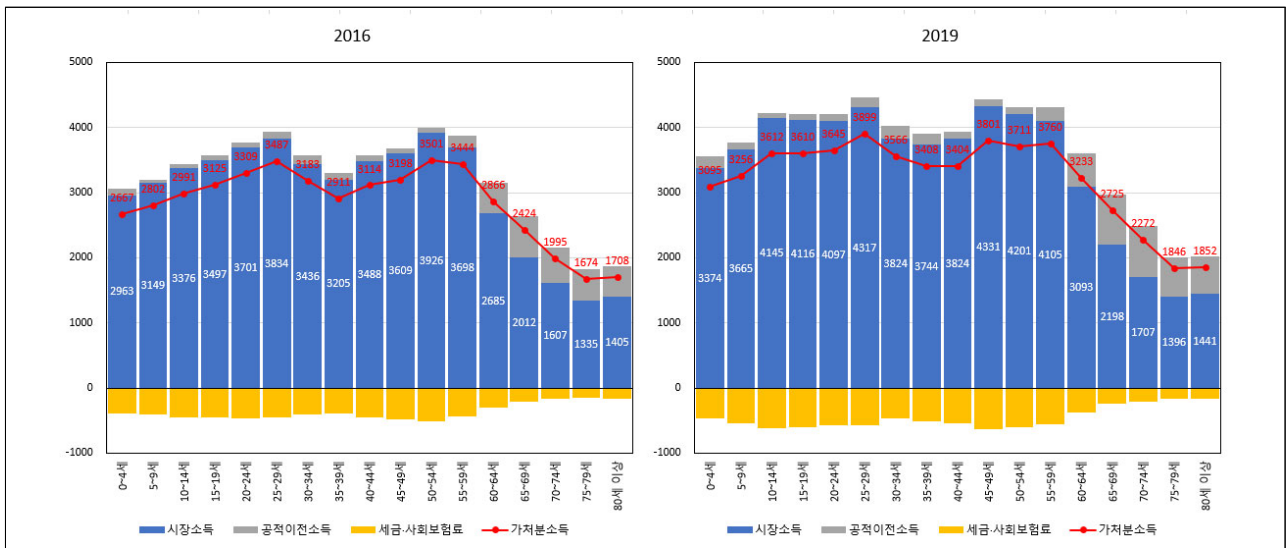
- 아동: 2018년까지 시장소득 빈곤율보다 가처분소득 빈곤율이 높았으나, 2019년부터 시장소득 빈곤율보다 가처분소득 빈곤율이 낮아졌음.

□ 복지국가는 기능적으로는 조세와 공적 이전(transfer)을 통한 계층 간, 세대 간, 생애주기 간 재

분배를 통해 소득과 소비를 평탄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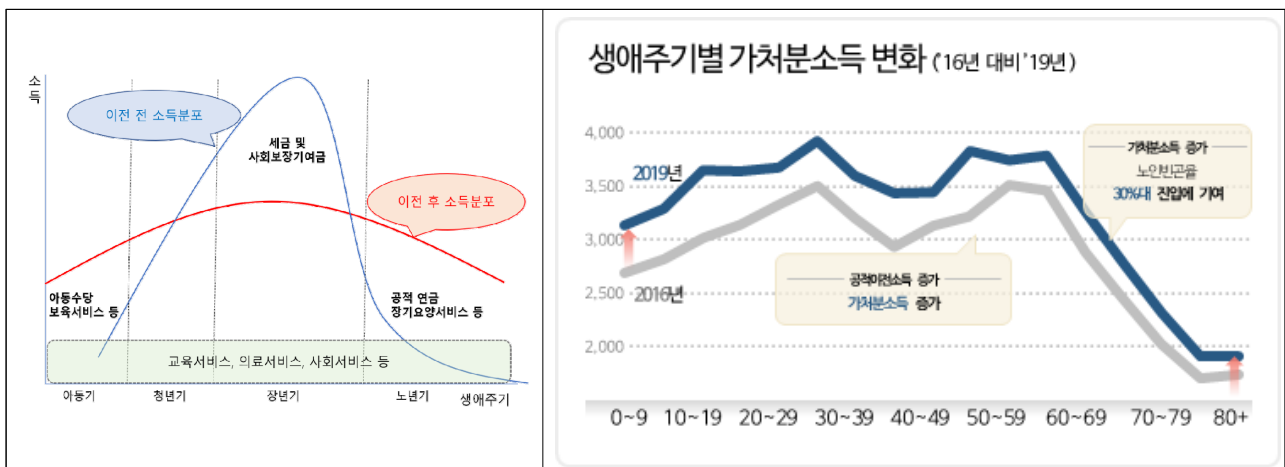
- 한국 노인의 높은 빈곤율은 한국 복지국가의 생애주기 간 재분배의 실패를 알리는 지표였으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와 같은 점에서 부분적인 개선이 이뤄짐.
- 아동 빈곤율은 10% 이하로, 노인 빈곤율은 처음으로 40% 이하 수준으로 떨어졌음. 국민연금의 성숙과 기초연금액 인상으로 노인집단의 가처분소득은 더욱 상승했을 것으로 예상됨.

[그림 3-9] 2016~2019년 생애주기별 소득 변화



자료: 통계청. (2016, 2019).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그림 3-10] 생애주기별 소득 분배 이념형 및 2016~2019년 사이 한국의 생애주기별 가처분 소득 변화



자료: 1) 여유진. (2016). 생애주기별 소득·재산의 통합 분석 및 함의. p. 2.
2) 연구진 작성.

4.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대응의 버팀목

□ 2020년 2월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으로 경제 활력이 약화되어 취약계층, 노동자, 영세 소상공인 등을 중심으로 경제적 타격에 직면

- 2020년 정부는 8차례의 비상경제대책회의를 통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과감한 정책을 추진
 - 2020년 총 네 차례의 추경과 310조 원 규모의 재정금융 지원대책을 통해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취약계층, 위기가구 등을 최대한 지원하고자 총력

[그림 3-11]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주요 정책 추진내용

- 민생·금융 안정을 위한 50조 원 + α 의 금융 분야 위기 대응 프로그램 마련, 소상공인 보증 프로그램 마련 등 금융 부담완화, 27조 원 규모의 금융시장 안정화 대책 등
-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 12조 원 신규 공급, 특례보증 지원, 원금 만기 연장(6개월 이상), 이자 상환유예(6개월간), 신용 회복 및 채무 조정 지원, 주식 및 채권 안정 지원 등
- 1400만 가구 대상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소득 하위 70%), 취약계층 및 근로빈곤층 대상 사회보험료·전기 부담 감면 및 유예
- 17조 7000억 원 규모의 내수 보완 패키지 추진: 3조 3000억 원+ α 공공 부문 최종 구매 역할, 14조 4000억 원+ α 민간내수 보완, 취약 부문 세 부담 경감 등

자료: 정부 정책 브리핑 홈페이지. (2021.7.27.) 코로나 19 경제대책. <https://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72965> 에서 2022.4.4. 인출. 및 내용 요약함.

□ 정부는 2021년에도 장기화되는 방역상황과 피해 누적에 따라 민생회복 및 방역 지원을 위한 추경을 두 차례 편성하여, 누적된 코로나19 피해의 회복을 위해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추진

- 소득하위 80%+ α 국민에게 ①-1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1인당 25만원, 4인가구 100만원)을 지급하고, 기초수급자 등 296만명에는 ①-2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1인당 10만원, 4인가구 40만원)을 지급

□ 이와 같은 위기가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 현금지원을 통해 가계 가처분소득 보전에 기여, 2019~2021년 연간 소득 변화를 보면, 사업소득, 재산소득이 불안정하게 요동쳤지만, 공적이전소득의 증가로 가처분 소득 유지, 증가(통계청, 2022d)

- 전체 가구를 기준으로 가계동향 자료를 보면, 월 기준 가처분소득은 ('19년 3분기) 338.3만원 → ('20년 3분기) 351.9만원 → ('21년 3분기) 377.3만원으로 꾸준히 증가함.

- 그러나, 근로소득은 ('19년 3분기) 279.1만원 → ('20년 3분기) 278.1만원 → ('21년 3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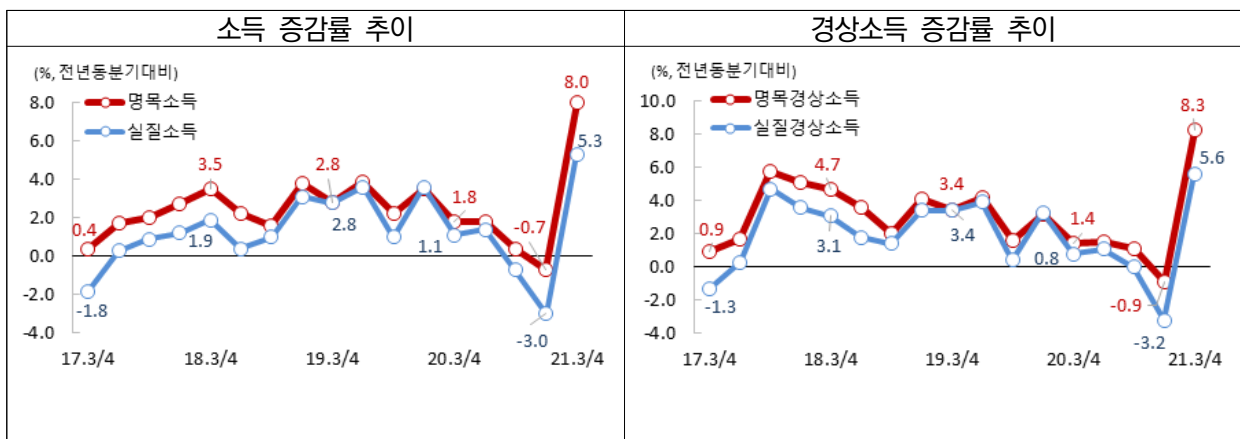
295.4만원으로 코로나19 로 인해서 2020년에는 감소했다가 2021에 회복됐음. 사업소득도 이와 유사한 경향을 보임.

- 공적이전소득이 같은 기간 꾸준하게 증가하면서 가계의 소득 상실을 채움. 공적이전소득액은 ('19년 3분기) 36.2만원 → ('20년 3분기) 44.7만원 → ('21년 3분기) 58.3만원으로 꾸준하게 증가

□ 적극적인 재분배 정책을 통해서 소득 분배 지표는 2020년에 일시적으로 악화했으나, 2021년에는 다시 회복됐으며, 코로나 범유행 기간(2020~2021년) 동안 경상소득의 안정화를 유도(통계청, 2021.11.18.)

- 균등화 가처분소득 기준 5분위 비율(2인 이상 비농림어가 기준)은 ('19년 3분기) 4.83 → ('20년 3분기) 4.92 → ('21년 3분기) 4.55로 2021년에는 코로나 범유행 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했음.

[그림 3-12] 2017~2021년 소득 증감률 추이



주: 2019년 개편 이전 시계열은 비농림어가 대상

자료: 통계청. (2021.11.18.). 2021년 3/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http://kostat.go.kr/assist/synap/preview/skin/miri.html?fn=edc47130570300318120146&rs=/assist/synap/preview> 에서 2022.1.23. 인출.

□ 코로나19 대응 건강보험의 역할: 건강보험은 코로나 진행 상황에 맞춰 ‘예방, 진단, 치료’ 전 과정에서 맞춤형 수가를 마련하고 지원.

- 건보 보험료 부담은 줄이고 지출은 늘려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 코로나19 대응이 적시 적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건강보험을 통해 ‘예방, 진단, 치료’ 전 과정에 대해 맞춤형 수가 지원
 - 2020년 취약계층 건보료 경감을 위해 6,459억 원이 지원(코로나19 보험료 경감액 총 9,115억 원 중 국가 예산으로 지원한 2,656억 원을 차감한 금액)

- 2022년 1월까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수가 개선으로 건강보험(+의료급여) 재정이 추가로 약 3조 3,489억 원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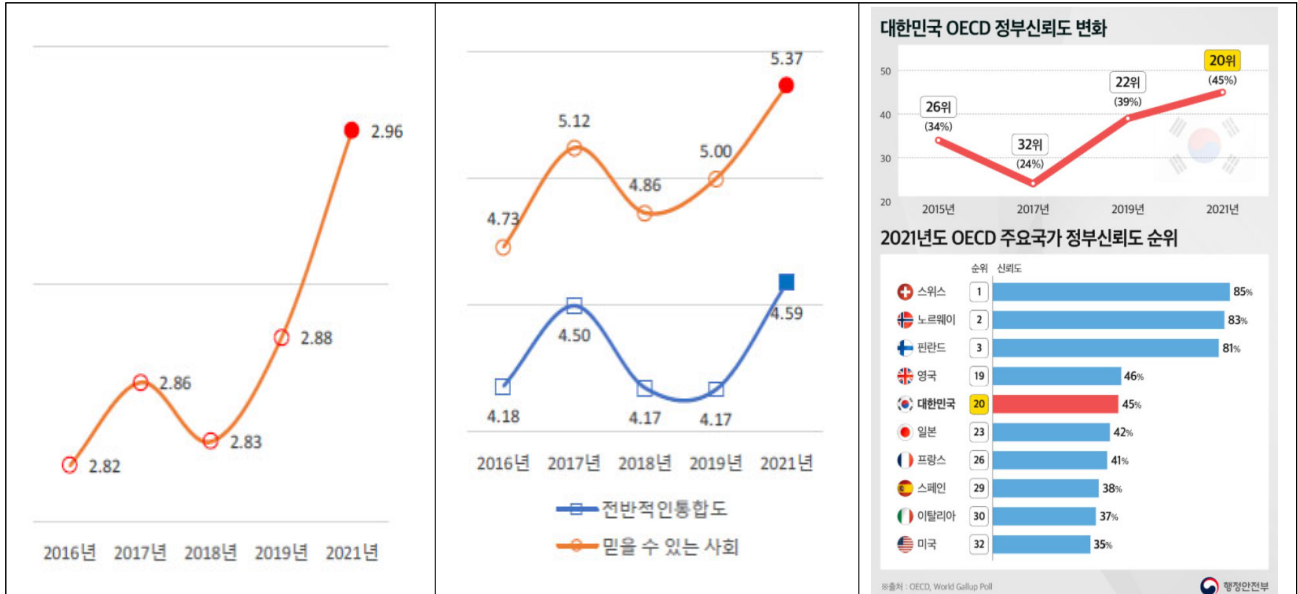
[그림 3-13] 코로나19 대응 건강보험 수가지원 현황

참고			코로나19 수가 개선 현황 요약표 ('22.1.31. 누적 청구기준)	
분야	주요 과제	청구금액(억원)		
① 코로나19 발생 및 확산 예방	① 고위험집단 등 감염예방·관리료	1,919		
	② 요양병원/정신병원 신규 입원환자 입원격리관리료/격리실 입원료	125		
	③ 수술실 격리관리료	0.32		
② 코로나19 진단검사 제고	① 코로나19 PCR 검사 - 단독검사 수가	8,012		
	② 코로나19 PCR 검사 - 취합검사 수가	1단계(그룹) 596 2단계(개별) 5.4		
	③ 코로나19 응급용 선별 PCR 검사 수가	303		
	④ 코로나19-인플루엔자 동시진단 PCR 검사 수가	32		
	⑤ 코로나19 신속항원 검사 수가	69		
③ 코로나19 확진자 등 적정치료 지원	【1】 중증 확진자 치료 지원			
	① 격리실 입원료	4,955		
	②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의 중환자실 입원료 및 중환자실 음압격리관리료	1,481		
	【2】 경증 확진자 치료 지원			
	① 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료	1,111		
	② 재택치료 진료·관리	680		
	③ 재택치료 전용생활치료센터 수가	-		
	④ 코로나19 외래진료센터 수가	0.18		
	⑤ 코로나19 노인요양시설 항체치료제 방문료	-		
	⑥ 코로나19 투약·안전관리료	-		
	【3】 응급환자 치료 지원			
	① 중증응급진료센터 격리진료구역 수가	429		
	② 선별진료소 응급의료 수가	151		
	③ 응급실 코호트 격리구역 수가	-		
④ 코로나19 효과적 대응 위해 신규 제도/기관 지원	① 국민안심병원 수가	1,173		
	② 호흡기전담클리닉 수가	1,130		
	③ 비대면진료 수가	전화상담 658 대리처방 139		
	④ 코로나19 예방접종 한시적 건강보험 적용('21.12.31. 지급종료)	8,588		
⑤ 환자/의료인력/의료기관·보건소의 애로사항 해소 등 지원 확대	【1】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환자 치료 강화			
	① 혈액투석 환자 지원 수가	18		
	② 코로나19 우울 관련 수가	0.3		
	【2】 의료인력 지원 확대 및 의료기관/보건소 애로사항 해소			
	① 야간간호료	238		
	②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	1,393		
	③ 인력·시설 등 현황 신고 유예	-		
	④ 코로나19 확진자 포괄/신포괄 수가제 적용 제외	-		
	⑤ 건강진단결과서 한시적 건강보험 지원	283		
합 계		약 33,489		

자료: 보건복지부. (2022b). 2022년 제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자료(내부자료).

5. 삶의 질 및 정부 신뢰도 향상

[그림 3-14] 국민으로서의 자부심, 전반적인 사회통합, 신뢰도 수준



자료: 1) 여유진, 우선희, 곽윤경, 김지원, 강상경. (2021).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 연구(VIII): 사회·경제적 위기와 사회통합.
 2) 행정안전부. (2021.7.9.).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정부신뢰도에서 대한민국 20위 기록, 역대 최고 순위.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08&nttId=85616 에서 2022.1.23. 인출.

- 한국인의 국민으로서의 자부심, 전반적인 사회통합 수준은 2018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사회에 대한 신뢰도는 2021년 크게 상승함.
 - 코로나19 범유행으로 개인적·국가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었지만, 다른 국가에 견줘 성공적인 방역이나 경제적인 성과에 대한 평가인 것으로 풀이됨.
 - 같은 조사에서 대인 신뢰도, 개인의 사회자본은 하락했음. 범유행 상황에서 개인들 사이의 신뢰도는 상대적으로 줄었지만, 국가에 대한 신뢰도 및 자부심이 상승한 점을 눈에 띄는 대목
- OECD(2021b)의 Government at a Glance에서도 한국인의 정부 신뢰도가 눈에 띄게 상승. 지난 2018년 32위에서 2020년 20위로 크게 상승
 - 정부신뢰도는 OECD의 의뢰로 ‘월드 갤럽 폴(World Gallup Poll)’이 조사를 진행하며, 조사 대상국 국민(1,000명)에게 ‘당신은 중앙정부를 신뢰하십니까?(Do you have confidence in national government?)’라고 물었을 때, ‘그렇다(yes)’고 대답한 비율로 측정

- 영국의 민간 연구기관인 Legatum Institute에서 제시하는 삶의 질 지수인 Legatum Prosperity Index에서 한국의 순위는 2017년 29위에서 2021년 29위로 유지
- 안전/보안, 개인의 자유 영역에서 개선이 있었지만, 사회자본, 주거 환경 분야에서 일부 하락
- OECD Better Life Index⁴⁾ 등에서도 한국이 사회적 자본 수준은 다른 국가에 비해 매우 낮게 나타남.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주변 사람이 있는지 여부 등에서 한국의 응답 비율은 낮게 나옴. 한국의 사회정책에서 중요하게 고려할 사항(OECD, 2022f)

〈표 3-2〉 Legatum Index의 삶의 질 지수

연도	순위		지수	
	2017	2021	2017	2021
Legatum Prosperity Index	29	29	72.19	73.52
안전/보안	39	37	78.68	82.60
개인의 자유	54	43	64.98	69.73
국가행정	31	30	70.12	71.69
사회자본	131	147	45.92	43.98
투자 환경	24	19	72.59	75.72
기업 여건	47	46	60.83	63.40
기반 시설 및 시장 접근	19	17	77.21	79.24
경제의 질	7	9	75.53	73.81
주거 환경	23	24	90.37	91.26
건강	5	3	83.12	84.06
교육	2	2	88.83	88.34
자연 환경	59	56	58.16	58.43

자료: Legatum Institute. (2021). 2021 Full Data Set - Legatum Prosperity Index. <https://www.prosperity.com/about/resources> 에서 2022.2.7. 인출.

- 정부에 대한 신뢰가 사회정책의 확대에 대한 지지로까지 이어지지 않는음.
- 한국복지패널의 2016~2019년 부가조사를 보면, 복지 확대를 위한 세금 증가에 동의하는(매우 동의 및 동의) 비율은 2016년 31.58%에서 33.3%로 소폭 상승. 반대하는 비율(매우 반대 및 반대)의 비율은 2016년 35.35%에서 2019년 32.5%로 약 3% 포인트 감소
- 소득 격차 해소가 정부의 책임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일부 감소, 동의하는 비율이 2016년 68.59%에서 64.14%로 약 4% 포인트 이상 감소. 선별과 보편의 대리 변수로 볼 수 있는 '가난한 사람에게만 복지 제공'에 대해서는 보편복지에 대한 지지 정도가 높아진 것으로 확인

4) OECD Better Life Index도 2017년 2020년 수치가 발표됐지만, 2020년 자료도 개별 국가의 자료는 2013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서, 2017년 이후 변화를 반영했다고 보기 어려움.

- 복지패널은 복지태도를 묻는 부가조사를 3년에 한 번씩 실시하면서 2020년 이후 복지태도를 확인하지 못함.

〈표 3-3〉 한국인들의 복지에 대한 태도

(단위: %)

구분	소득 격차 해소는 정부의 책임이다		복지는 가난한 사람에게만 제공해야 한다		복지 확대를 위해 세금을 늘릴 필요가 있다**	
	2016	2019	2016	2019	2016	2019
매우반대	1.12	0.87	8.86	6.13	3.71	2.7
반대	9.6	9.9	35.11	26.86	31.64	29.8
중간	20.69	25.09	20.75	22.34	33.08	34.21
동의	50.62	49.48	30.16	38.47	28.5	30.47
매우동의	17.97	14.66	5.12	6.2	3.08	2.83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16~2019). 한국복지패널 원자료 저자 분석

IV

문재인 정부가 한국 복지국가에 주는 의미 및 앞으로 과제

1. 한국 복지국가에 남긴 의의

[그림 4-1] 복지국가의 4대 구성 요소의 측면에서 중요한 진전

문재인 정부 이전		문재인 정부 이후
대상의 한정성 (취약계층 사각지대 해소에 중점)	대상 의 포용	대상의 포괄성 (보편적, 포괄적 복지 확대)
최소한의 기초생활 보장	급여 의 포용	전 생애 기본생활 보장 추구
민간중심 전달, 서비스 제공의 임의성	전달 의 포용	국가책임 강화, 공공성 확대, 서비스질 제고
경제수준 및 사회위험도 대비 현저히 낮은 공공사회복지지출	재정 의 포용	공공재원의 대폭 강화

자료: 연구진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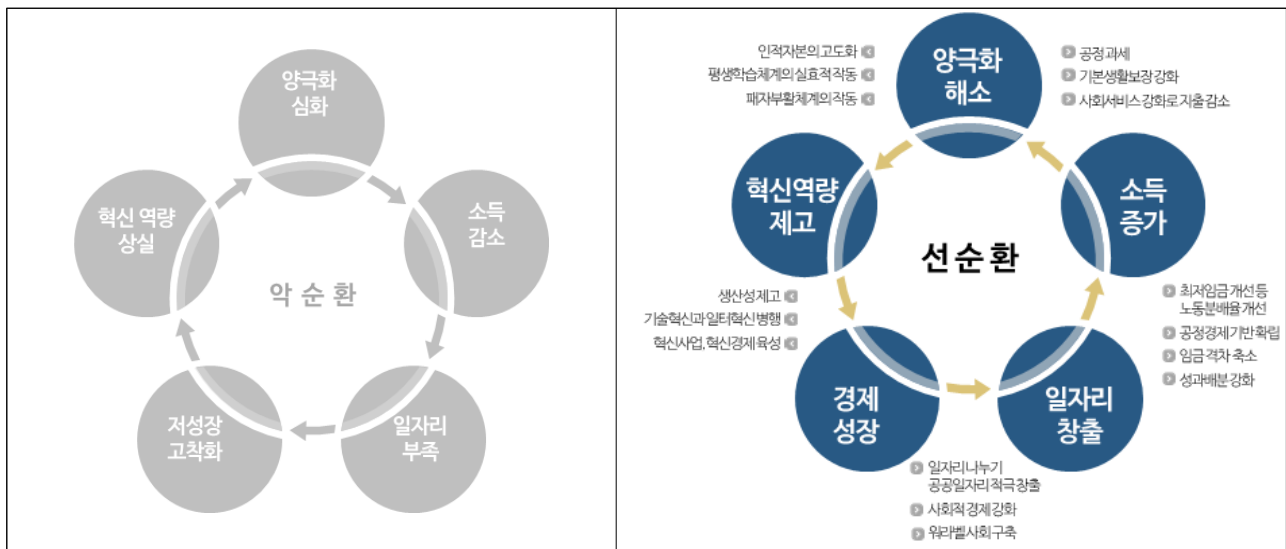
□ 문재인 정부는 2017~2020년 사회보장 전 분야에서 대상자 확대, 급여 수준 인상, 공적 재원 조달의 확대 및 인프라 구축을 이끌어냈음. 이는 Palme(2021)가 제시한 복지국가의 4대 측면에 따른 성취로 볼 수 있음. 이를 통해서 복지국가의 외형적, 형식적 완성을 이뤘음.

- ① 대상의 보편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전국민고용보험 시도, 상병수당 도입 결정, 기초연금 확장, 아동수당 및 영아수당 도입 등을 통해서 대상자의 보편성 확장
- ② 급여의 충분성: 기초연금, 실업급여의 급여 수준 인상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아동수당 도입으로 급여 제공
- ③ 재정의 안정성: 지난 2017년 GDP 대비 10.1% 수준에서 12.2%로 증가. 대상자 확대, 급여 충분성 확보를 위한 재정적 기반 조성
- ④ 인프라의 공공성: 사회서비스원 건립, 치매안심센터 256곳 개소, 지역사회통합돌봄 16개 선도시범 지역 선정, 아동돌봄 인프라 확충 등을 비롯, 실시간소득파악시스템 구축 작업 등으로 복지국가 인프라 형성

□ 문재인 정부는 한국 복지국가의 발전 경로에서 보면 두가지 의미를 가짐. 첫째, 10년의 보수 정부 기간 동안 위축됐던 복지정책들을 다시 활성화했고, 둘째, 복지정책의 과감한 확장을 통해서 보편적 복지국가의 기반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김대중 정부(1998~2003)는 1990년대 후반 금융 위기 과정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입하고, 사회보험의 구조 개혁 및 복지재정 확대를 통해서 한국 복지국가의 시발이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노무현 정부(2003~2008) 역시 참여복지의 기조 아래 복지 확장의 기조를 유지
- 이명박·박근혜 정부(2008~2017) 기간 동안 보수적인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한국 복지국가의 발전은 정체기를 겪었음. 문재인 정부는 이와 같은 정체 국면을 극복하고, 보편적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기반을 갖추는 데 공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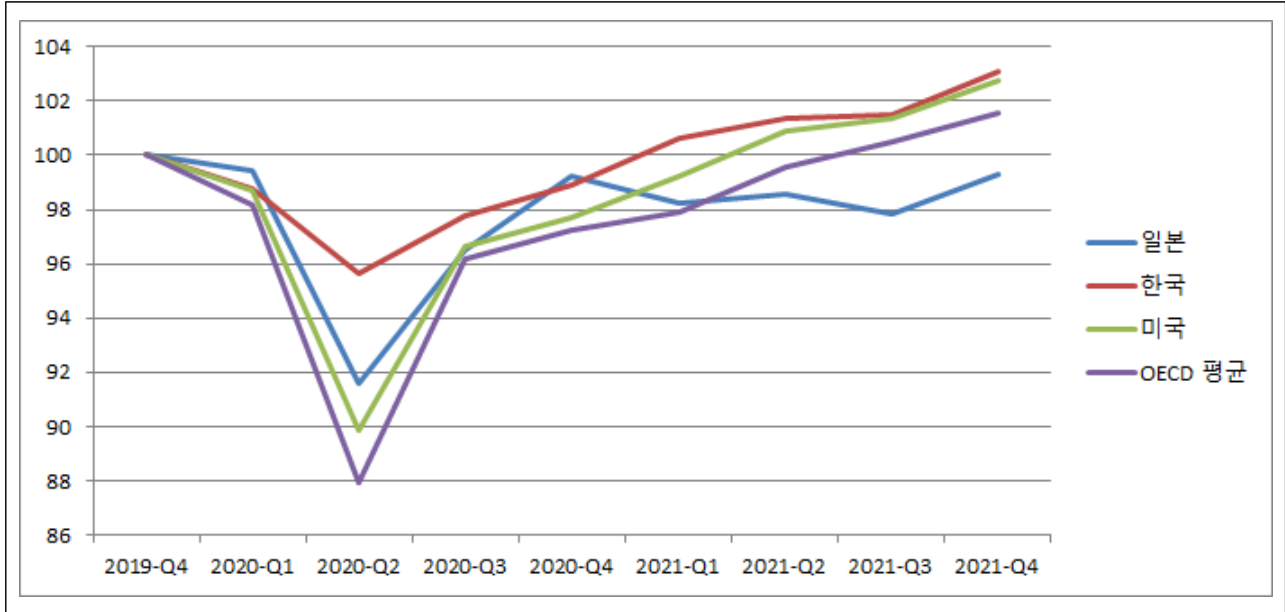
[그림 4-2] 복지-경제-고용의 악순환 구조와 선순환 구조



자료: 연구진 작성.

- 문재인 정부는 포용적 복지국가의 기조 아래에서 복지-경제-고용의 선순환 고리를 구축하고자 했음.
 - 세 가지의 고리들이 악순환할 경우, '양극화 심화 → 소득 감소 → 일자리 부족 → 저성장 고착화 → 핵심 역량 상실'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이어지지만, 선순환 고리에서는 '소득 증가 → 양극화 해소 → 혁신 역량 제고 → 경제 성장 →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이 이뤄짐.
- 문재인 정부에서는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에서도 복지와 경제, 고용의 지표가 고르게 긍정적인 지표를 보였음. 다른 복지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러한 추이는 더욱 분명한.
 - 한국은 코로나19 범유행 상황에서 경제 성장률을 가장 완만하게 관리했을 뿐더러, 2019~2021년 상황에서 가장 빠르게 경제 회복을 한 나라 가운데 하나였음.

[그림 4-3]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이후 주요국가들의 GDP 변동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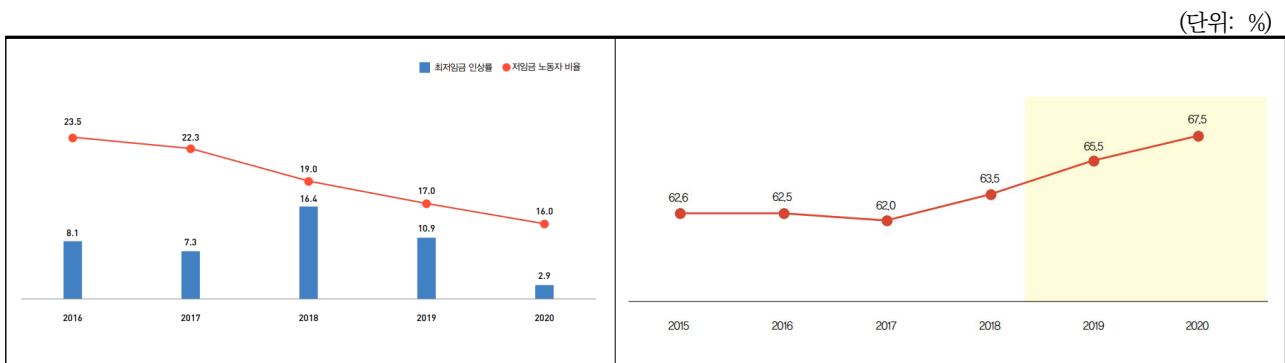


주: 2019년 GDP 고정 가격 기준.

자료: OECD. (2022g). Real GDP Forecast. <https://data.oecd.org/gdp/real-gdp-forecast.htm#indicator-chart> 에서 2022.3.31. 인출.

□ 문재인 정부 시기의 복지, 고용, 경제 지표를 각각 보면 복지, 고용, 경제 사이의 선순환의 이뤄졌을 것으로 추정됨.

[그림 4-4] 저임금 노동자 비율 및 노동소득분배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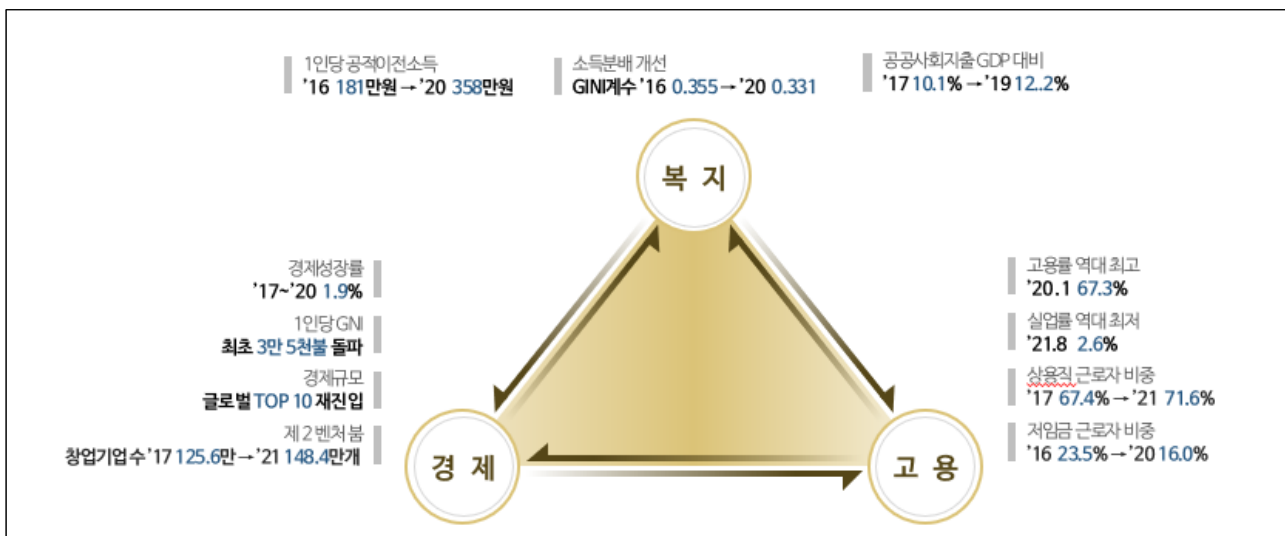


자료: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2022). 소득주도성장 성과와 과제. pp. 22-23.

○ 고용 관련 수치는 몇 가지 ‘역대’급 기록을 경신. 2021년 8월 실업률 2.6%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고, 고용률은 2020년 1월 67.3%를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함. 노동소득 분배 비율도 2020년 67.5%를 기록. 2017년 62.0%에서 5.5% 포인트 상승(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2022)

- 노동의 질도 일부 개선돼서 저임금 근로자 비중도 23.5%(‘16년 기준)에서 16.0%(‘20년 기준)로 하락. 고용보험 가입자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임금 5분위 배율도 개선되면서 노동시장의 임금 격차도 완화함.
- 정부는 적극적인 재분배 정책을 통해서 1인당 공적이전소득 수준을 181만원(‘16년 기준)에서 358만원(‘20년 기준)으로 올리고, 소득분배도 개선해서 지니계수를 0.355(‘16년 기준)에서 0.331(‘20년 기준)로 개선

[그림 4-5] 문재인 정부 시기 골든 트라이앵글의 성과



자료: 연구진 작성

[그림 4-6] OECD의 한국 경제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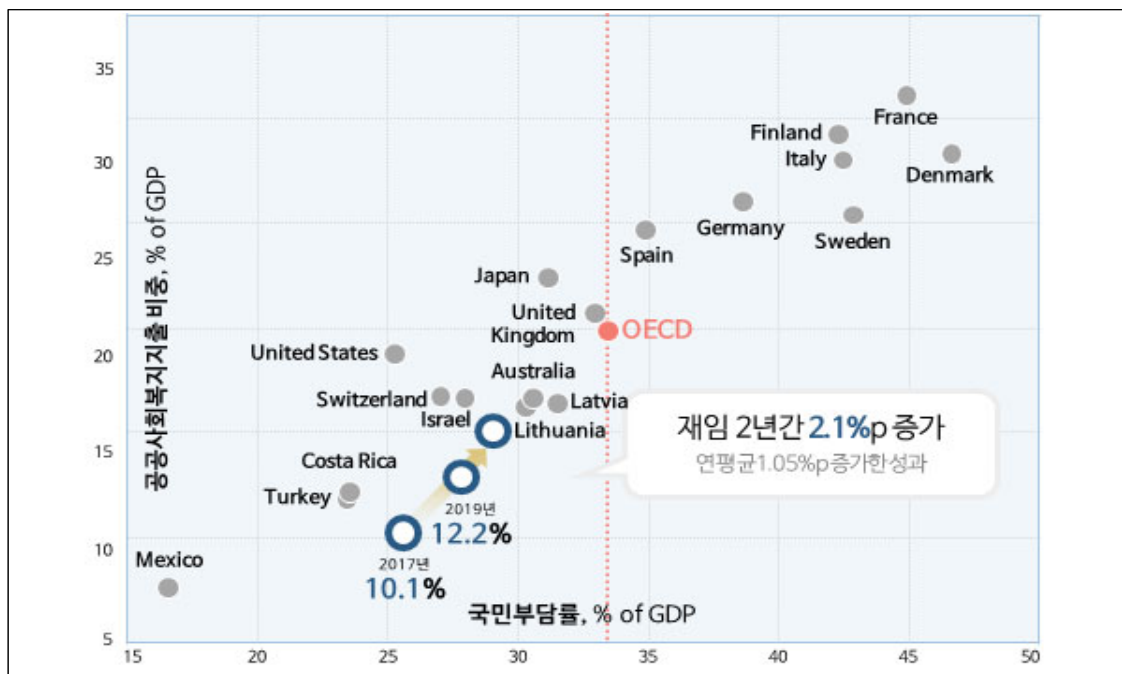
자료: OECD. (2021c). Inclusive Growth Review of Korea Report.

- OECD는 2021년에 발간한 'Inclusive Growth Review of Korea' 보고서에서 문재인 정부가 국민의 삶의 질과 수준을 개선하는 주목할 만한 성과를 이뤄냈다고 평가
- 혁신적 포용국가 모델에 대해서 “지난 정부의 성장 일반도의 정책에서 벗어나 성장과 분배의 조화를 개선시켰으며 동시에 사회 전반에 걸쳐서 공정한 참여의 기회를 강조했다”고 평가
- OECD 또 “문재인 정부는 사람을 정책의 중심에 놓고 경제 영역에서 평등한 기회와 경쟁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했고,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재분배 정책을 추구했다”고 평가
- 문재인 정부에서의 적극적인 사회정책으로 한국은 전형적인

‘저부담, 저복지’ 유형 복지국가에서 ‘중부담, 중복지’ 복지국가로의 궤적을 그리게 됨([그림 4-3] 참고).

- GDP 대비 공공 사회지출과 국민부담률을 기준으로 보면 한국은 코스타리카, 터키 등과 유사한 위치에 있는 ‘저부담, 저복지’ 유형에 속했으나, 지난 2007~2020년 사이 이스라엘과 라트비아에 근접하게 이동하는 것으로 관찰할 수 있음.
- 한국의 공공 사회지출이 증가 추세를 고려하면 장기적으로는 ‘중부담, 중복지’ 복지국가 유형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으면, 이번 정부에서 그러한 경향을 가속화한 것으로 판단됨.
- 참고로, 2021년 국민부담률은 27.9%에서 2025년에는 일부 사회보험 보험료율 인상, 가입자 확대 등으로 29.2%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기획재정부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그림 4-7] ‘중부담, 중복지’로의 궤적 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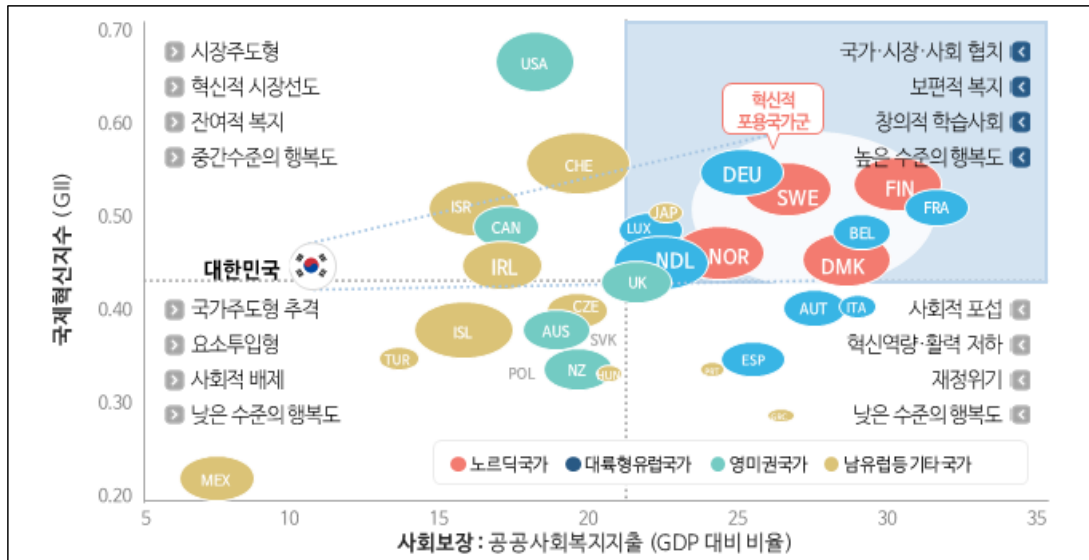


자료: OECD. (2022d). Global Revenue Statistics Database; OECD. (2022g). Social Expenditure Database, 기획재정부 (2021) 참고하여 작성.

- 복지국가는 인류 진보의 역사적 산물로서 19세기 말부터 시작되어 지금까지 끊임없이 진화하면서 발전되어온 것이라는 점에서, 한국 복지국가도 문재인 정부 이후 미래의 도전적 과제 앞에서 지속적으로 대응해가면서 국민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우리 사회를 통합과 역동으로 만들어가는 주요한 기제로 작동하여야 함.

- 끊임없이 위협으로 다가올 양극화, 불평등의 양상, 경제사회 구조의 전체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인구구조 변화와 함께 코로나 시대에 가중되는 다양한 사회적 위험을 맞이하여 향후 한국복지국가의 재구조화가 요구될 것임. 복지국가 재구조화의 작업은 다음 정부의 미션이 될 것.
- 이런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닦아 놓은 보편적 복지국가의 기반은 복지국가 재구조화를 위한 유리한 근거를 제공할 것이며, 나아가 문재인 정부가 천명한 혁신적 포용국가의 미래비전이 한국복지국가의 미래좌표를 설정하는 것과도 일치하게 됨.
- 「혁신적 포용국가 미래비전 2045」(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20. 6.)에서는 2045년 한국 사회가 혁신적 포용국가군에 안착하여 국가-시장-시민사회의 협치구조가 자리잡고, 보편적 복지가 구현되며 창의적 학습사회에서 역량이 지속적으로 개발되어 마침내 높은 수준의 행복도가 실현되는 사회가 됨을 지향점으로 제시하였음.
- 혁신지수(global innovation index)와 포용지수(GDP 대비 사회지출비 비중)가 모두 발달한 나라로 대다수의 노르딕복지국가와 독일, 프랑스, 벨기에의 유럽대륙형 복지국가가 포함되어 있는 집단이 혁신적 포용국가군이며 한국 복지국가도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좌표에 안착하기 기반이 일정 정도 갖춰짐.

[그림 4-8] '중부담, 중복지'로의 궤적 이동



자료: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9). 혁신적 포용국가 미래비전 2045. p. 26쪽의 그림 재작성.

2. 한국 복지국가의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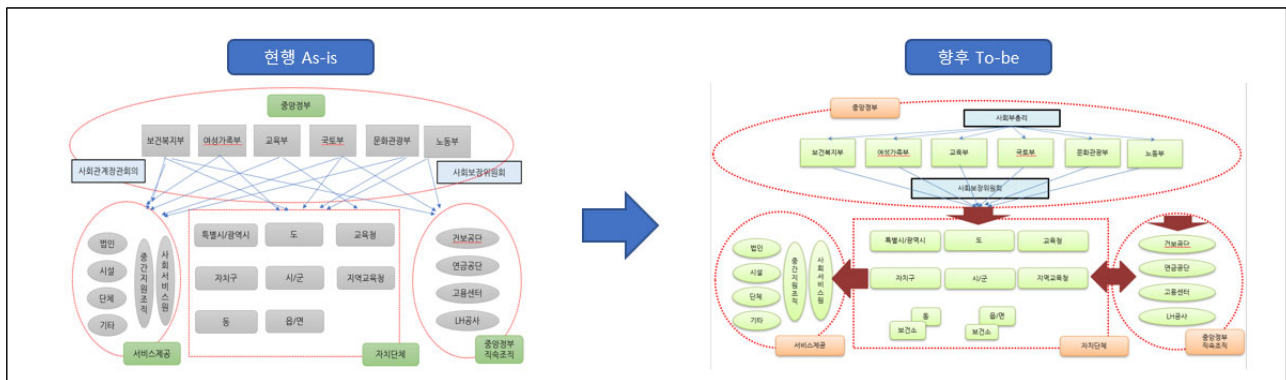
□ 사회보장제도 사이의 정합성을 기하는 접근이 필요함.

- 문재인 정부에서 한국의 복지국가는 제도적 외형을 갖추는 데 성공했으나, 제도의 도입 및 발전 경로에서 제도들이 시기별 요청에 따라 도입 및 성장. 따라서, 제도 사이의 정합성을 맞추는 노력이 필요
- 빈곤층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EITC, 긴급복지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기타 수당 제도 등의 시너지효과를 내기 위한 제도 간 정합성 고려
- 이를테면, 노후소득보장체계에서 기초연금, 국민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사이의 정합성을 찾기 위해서는 급여 대상자 및 급여 적정 상한선의 문제가 조정될 필요가 있음.

□ 사회서비스의 전달체계 개편 역시 시급한 과제임.

- 문재인 정부에서 사회서비스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제고하기 위해 의욕적으로 추진한 사회서비스원 및 커뮤니티케어는 도입 과정에서 여전한 시행착오의 과정을 거치고 있고 시범사업 수준에 놓임.
- 향후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사회서비스의 욕구가 더욱 증대되고 이에 따라 재정소요가 막대해질 것이므로 전달체계의 개혁을 통해 서비스의 적절성과 재정효율성을 함께 도모해야 함.

[그림 4-9] 중앙정부 차원의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방안



자료: 이태수, 남기철, 김형용. (2019). 문재인 정부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의 쟁점과 과제: 공공성 강화와 분권화를 중심으로. p. 81.

□ 사회보험의 보장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조적 개혁이 필요. 특히, 한국의 급속한 고령화를 고려하면 시급한 과제

- 국민연금은 낮은 보장성, 빨라지는 기금소멸 시점을 고려할 때 시급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의 모수 개혁을 비롯하여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제도로 개혁해야 함. 문재인 정부에서 제 4차 재정계산 등을 통해서 연금 개혁안을 제시했으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을 통한 사회적 합의안 도출에는 이르지 못했음.
 - 건강보험 역시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 1인당 의료기관 사용 빈도가 가장 높은 나라임. 국민건강 수준 제고 및 건강보장제도의 재정 안정성을 위해서 의료 전달 체계 개편이 시급함.
-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생태전환은 이미 늦은 과제임. 생태전환의 틀 안에서 복지국가의 미래를 그릴 필요
- 복지국가는 자본주의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토대 위에서 함께 성장했으나, 전통적인 자본주의의 성장모델에 대한 성찰이 이뤄지는 상황
 - 기후 위기가 동반하는 생태변화, 사회변화에 가장 큰 피해자는 취약계층이 될 것임. 성장 중심의 자본주의 체제에서 탈탄소, 생태경제의 테두리 안에서의 복지국가는 새로운 도전에 이미 직면했으며, 이에 대응하는 사회정책의 재구조화가 필요
- 시장의 양극화를 재분배를 통해서 해소했으나, 노동시장의 분배 구조를 개선할 필요
- 기술 발전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로 인해서 시장소득의 분배지표는 꾸준히 악화하고 있음. 지난 2016~2020년 5분위 배율은 10.9배에서 11.4배로, 시장소득 기준 빈곤율은 19.8%에서 21.3%로 증가
 - 시장소득의 양극화를 공적이전으로 상쇄하고 있으나, 노동시장을 통한 분배의 양극화 심화를 차단하는 접근에 더욱 적극적이어야 함.
- 현재 정부에서 적극적 사회정책을 폈으나, 국민들의 복지 체감도를 올리고, 복지국가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
- 국가적인 자부심이나 사회에 대한 신뢰도는 일부 개선됐으나, 국민들이 복지확장 혹은 세금 인상에 대해서는 여전히 회의적임.
 - 정책 집행과 성과, 체감에는 시차가 있다는 점도 고려 필요. 국민들의 사회정책 체감도를 올릴 수 있는 접근도 함께 필요
- 급격한 고령화에 대응하는 정책적인 준비가 무엇보다 필요한 상황

- 한국은 20년 내 세계 최장수 국가가 되면서, 이미 가장 낮은 출산율을 나타내고 있는 점을 고려. 주요한 정책 영역, 이를테면 국민연금 개혁,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 및 보장성 개선에서는 여전히 과제를 남김.

□ 사회적 취약 계층을 포착하고 지원하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

- 노인, 한부모, 아동 등 취약집단에 대해 적극적 공적이전소득을 통해서 빈곤율을 일부 낮추는데 성과가 있었으나, 장애인 집단은 상대적으로 방치됐음. 장애인 집단의 시장소득 빈곤율이 크게 증가하여 가처분소득 빈곤율이 완만하게 증가
- 20년 뒤에는 35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이주배경인구, 기술 변화 속에서 등장하는 취약 노동 인구에 대한 사회보장 정책도 적극적으로 준비할 필요



1. 국내 문헌

- 강혜규, 조성은, 이주민, 함영진, 문승현. (2021). 한국 보건복지의 역사적 성찰과 정책패러다임 전환기의 과제.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고용노동부. (2021b).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 업무 편람. 세종: 고용노동부.
- 관계부처합동. (2019). 문재인 정부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 관계부처합동.
- 관계부처합동. (2021). 문재인 정부 경제분야 36대 성과. 세종: 기획재정부.
- 교육부. (2021). 온종일돌봄추진단(내부자료).
- 교육부. (2022). 사회정책 5개년 성과 자료집. 세종: 교육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2021). 2020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
- 국정기획자문회의. (2017.7.).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서울: 국정기획자문회의.
- 근로복지공단. (2021.10.27.).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 피보험자 현황(내부자료).
- 기획재정부. (2021). 2021~2025 국가재정운용계획. 세종: 기획재정부.
- 김미곤, 강혜규, 고제이, 김태완, 남찬섭, 노대명, ... 최효진 (2018) 한국의 사회보장제도.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준영, 장재호, 김강호, 박상현. (2021). 플랫폼 종사자의 규모와 근무실태. 고용동향 브리프, 2021(9), 14-31.
- 김태완, 임완섭, 황도경, 정은희, 이주미, 강예은, 김상현. (2020). 2020년 사회보장 대국민 인식조사 연구. 세종: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현지, 김용진, 오윤지, 김태용, 이혜수. (2021). 2021 장애통계연보. 서울: 한국장애인개발원.
-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9). 혁신적 포용국가 미래비전 2045. 서울: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관계부처 합동. (2018). 문재인정부 '포용국가' 비전과 전략: 국민의 삶을 바꾸는 포용과 혁신의 사회 정책. 서울: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 보건복지부. (2022a). 2022년 보건복지부 업무계획. 세종: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2022b). 2022년 제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자료(내부자료).
-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2022). 소득주도성장 성과와 과제. 서울: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 여유진, 김미곤, 김기태, 정재훈, 김인춘, 서현수... 길리아노 보놀리. (2019). 노르딕 모델과 대륙형 모델의 형성 및 변천과정 연구. 세종: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여유진, 우선희, 박윤경, 김지원, 강상경. (2021).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 연구(VIII): 사회경제적 위기와 사회통합.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여유진. (2016). 생애주기별 소득·재산의 통합 분석 및 합의. 보건복지 ISSUE & FOCUS, 306, 1-8.
- 윤동열, 주무현, 고혜원, 김유빈, 김지운, 정동열, 강지원, 조준, 김승석(2021). 고용보험기금 사업 효율화 방안 검토. 기획재정부·건국대학교.
- 이원진, 김현경, 함선유, 하은솔. (2021). 한국 소득분배 추이와 영향요인.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태수, 남기철, 김형용. (2019). 문재인 정부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의 쟁점과 과제: 공공성 강화와 분권화를 중심으로. 사회 복지정책, 56(3), 63-92.
- 조성은, 고경환, 길현중, 김기태, 김수진, 김조설.. 최요한. (2019). 한국 사회보장제도의 역사적 변화과정과 미래 발전 방향.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세 및 고용보험 소득정보연계추진단. (2021.12.). 소득정보 인프라 구축 현황(내부자료).
최병호. (2014).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변천과 과제. 예산정책연구, 3(1), 89-129.

2. 데이터

통계청. (2016~2019).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16~2019). 한국복지패널 원자료.
한국행정연구원. (2020). 2020 사회통합실태조사 원자료.

3. 인터넷 인출 자료

강건택. (2021.4.14.). 한국 출산율 2년 연속 전세계 꼴찌...14세이하 비율도 최하위.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10414081600072>에서 2022.2.7. 인출.

고용노동부. (2021a).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https://www.index.go.kr/potal/stts/idxMain/selectPoSttsIdxMainPrint.do?idx_cd=2478&board_cd=INDX_001 에서 2022.1.25. 인출.

고용노동부. (2022.1.5). 시행 2년째 맞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확실히 정착시키고 성과를 내겠습니다.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90158> 에서 2022.1.27. 인출.

고용보험 홈페이지, 육아휴직(부부동시).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302Info.do> 에서 2022.1.27. 인출.

관계부처 합동. (2021.7.14.). 한국판 뉴딜 2.0 : 미래를 만드는 나라 대한민국.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jsessionid=Hlmgc1PK9F3IN4DAtZphLAht.node60?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55824&menuNo=4010100 에서 2022.1.27. 인출.

관계부처합동. (2021.12.30.). 최근 고용상황 점검 및 2022년 고용정책과제 발표.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https://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3132 에서 2022.1.27. 인출.

교육부. (2018.9.13). 포용국가 전략회의 카드뉴스. <https://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72714&lev=0&statusYN=W&s=moe&m=0308&opType=N&boardSeq=75280#> 에서 2022.1.27. 인출.

보건복지부. (2019.3.6.). 사회서비스원, 서울·대구·경기·경남에서 최초 설립·운영.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347990&page=1 에서 2022.1.27. 인출.

사회서비스 중앙지원단 홈페이지. 시도사회서비스별 현황 자료. <https://www.pass.or.kr/social-servicecenter-introduction-state/index/sido> 에서 2022.1.27. 인출.

열린재정(재정정보공개시스템) 홈페이지. <https://www.openfiscaldata.go.kr/op/ko/index> 에서 2022.1.27. 인출.

정부 정책 브리핑 홈페이지. (2021.11.17). 지역사회통합돌봄. <https://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66645> 에서 2022.3.31. 인출.

정부 정책 브리핑 홈페이지. (2021.7.27.). 코로나 19 경제대책. <https://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72965> 에서 2022.4.4. 인출.

정부업적평가홈페이지. 100대 국정과제. https://www.evaluation.go.kr/psec/np/np_2_1_2.jsp 에서 2022.1.27. 인출.

중앙생활보장위원회. (2021.7.30.). 중앙생활보장위원회,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 5.02% 인상(4인 기준).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보도자료.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

- ONT_SEQ=366675 에서 2022.1.23. 인출.
- 통계청. (2020). 한국 2020년 출산율, 2020년 출생통계(확정). 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428에서 2022.2.2. 인출.
- 통계청. (2021.11.18.). 2021년 3/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http://kostat.go.kr/assist/synap/preview/skin/miri.html?fn=edc47130570300318120146&rs=/assist/synap/preview> 에서 2022.1.23. 인출.
- 통계청. (2021.11.4.). 2021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비임금근로 및 비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 <http://kostat.go.kr/assist/synap/preview/skin/miri.html?fn=d0f46172593386804090839&rs=/assist/synap/preview> 에서 2022.1.25. 인출.교
- 통계청. (2021.12.9.). 장래인구추계: 2020~2070년(보도자료). https://kostat.go.kr/portal/korea/kor_nw/1/2/6/index.board?bmode=read&bSeq=&aSeq=415453&pageNo=1&rowNum=10&navCount=10&currPg=&searchInfo=&searchTarget=title&sTxt= 에서 2022.1.25. 인출.
- 통계청. (2021a). 경제활동인구조사: 성/근로형태별 임금근로자 규모 및 비중(총괄).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E7106S&conn_path=I3 에서 2022.1.25. 인출.
- 통계청. (2021b).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사회보험가입자 비율 및 증감.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E7081S&conn_path=I3 에서 2022.1.25. 인출.
- 통계청. (2021c). 부양비 및 노령화지수(OECD).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2KAA202_OECD&conn_path=I3 에서 2022.3.31. 인출.
- 통계청. (2021d). 장애연금 수급자 현황.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22&tblId=DT_32202_B068&vw_cd=MT_ZTITLE&list_id=322_32202_04&scrId=&seqNo=&lang_mode=ko&obj_var_id=&itm_id=&conn_path=E1 에서 2022.1.25. 인출.
- 통계청. (2021e). 사회복지 지출규모. 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59 에서 2022.3.31. 인출.
- 통계청. (2021f). 가계금융복지조사: 소득분배지표.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HDLF05&conn_path=I2 에서 2022.3.31. 인출.
- 통계청. (2021g). 가계금융복지조사: 소득분배지표(연령계층별).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HDLF06&conn_path=I2 에서 2022.3.31. 인출.
- 통계청. (2022a). 정부 지출 구성. http://index.go.kr/smart/mbl/chart_view.do?idx_cd=5017 에서 2022.4.4. 인출.
- 통계청. (2022b).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현황. 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60 에서 2022.1.25. 인출.
- 통계청. (2022c). 근로장려금 신청/지급현황. 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826 에서 2022.1.23. 인출.
- 통계청. (2022d). 가계동향조사: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 (전국,1인이상).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L9U001&conn_path=I3 에서 2022.3.16. 인출.
- 행정안전부. (2021.7.9.).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정부신뢰도에서 대한민국 20위 기록, 역대 최고 순위.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08&nttId=85616 에서 2022.1.23. 인출.

4. 해외 문헌

- Economic Policy Uncertainty. (2022). *Economic Policy Uncertainty Index*. <https://www.policyuncertainty.com/index.html> 에서 2022. 1. 23. 인출.
- EMDAT. (2020). *OFDA/CRED International Disaster Database*. Université catholique de Louvain - Brussels - Belgium. <http://asq.kr/yUNvz0DZ> 에서 2022.1.25. 인출.
- Helliwell, J. F., Layard, R., Sachs, J., and De Neve, J.-E, Huang, H., and Wang, S. (2017). *World Happiness Report 2017*. New York: UN 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
- Legatum Institute. (2021). *2021 Full Data Set - Legatum Prosperity Index*. <https://www.prosperity.com/about/resources> 에서 2022.2.7. 인출.
- OECD. (2009). *Government at a glance 2009*. Paris: OECD.
- OECD. (2017). *Government at a glance 2017*. Paris: OECD.
- OECD. (2021a). *Economic Outlook No 109 - October 2021 - Long-term baseline projections*.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EO109_LTB 에서 2022.1.25. 인출.
- OECD. (2021b). *Government at a glance 2021*. Paris: OECD.
- OECD. (2021c). *Inclusive Growth Review of Korea Report*. Paris: OECD.
- OECD. (2022a). *Self-employment rate (indicator)*. <https://data.oecd.org/chart/6EfG> 에서 2022.2.7. 인출.
- OECD. (2022b). *Fertility rates (indicator)*. <https://data.oecd.org/pop/fertility-rates.htm>에서 2022.2.2. 인출.
- OECD. (2022c). *Trust in government (indicator)*. <https://data.oecd.org/gga/trust-in-government.htm> 에서 2022. 3.31. 인출.
- OECD. (2022d). *Global Revenue Statistics Database*. <https://www.oecd.org/tax/tax-policy/global-revenue-statistics-database.htm>에서 2022.1.26. 인출.
- OECD. (2022e). *Social Expenditure Database(SOCX)*. <https://www.oecd.org/social/expenditure.htm>에서 2022.1.26. 인출.
- OECD. (2022f). *Better Life Index*. <https://www.oecdbetterlifeindex.org/countries/korea/> 에서 2022.2.7. 인출.
- OECD. (2022g). *Real GDP Forecast*. <https://data.oecd.org/gdp/real-gdp-forecast.htm#indicator-chart> 에서 2022. 3.31. 인출.
- Palme, J. (2021). *The Social Dimension of Pandemics: Social Security post-Covid-19*. 한국보건사회연구원 50+1 주년 국제학술심포지움 발표 자료.
- Rita M. Meganck & Ralph S. Baric.(2021). Developing therapeutic approaches for twenty-first-century emerging infectious viral diseases. *Nature Medicine*, 27, 401-410.